

WHITE PAPER
ABOUT
YEMEN REFUGEES
2018

YEMEN
SANA'A

MALAYSIA
KUALA LUMPUR

KOREA
JEJU



2018 제주 예멘난민 백서

2부 난민 컨트롤타워

제1장 예멘 난민, 눈앞의 현실

제2장 제주청의 발걸음

제3장 난민심사

제1장 예멘 난민, 눈앞의 현실¹⁾

예멘의 시곗바늘

“전쟁을 선포하는 건 늙은이들이지만, 싸워야 하고 죽어야 하는 건 젊은이들이다.”

미국의 대통령을 지낸 허버트 후버의 일갈이다. 이 말을 젊은이의 나라 예멘에 적용한다면 ‘끌려가서 싸우다 죽거나, 아니면 탈출하거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아라비아 펠릭스(Arabia Felix). 로마와 향료무역을 하며 번성을 누리던 예멘에 붙여진 별명으로 ‘풍요로운 아라비아’, ‘행복한 아라비아’란 뜻이다. 아라비아 반도 남서쪽에 자리 잡은 예멘은 국가 면적이 우리나라보다 5배나 크지만 인구는 2,960만 명에 불과하고, 국민 평균 연령은 19.5세로 무척 젊은 나라다. 25세 이하 인구가 전 국민의 60%를 차지한다. 젊은이가 압도적으로 많기에 발전 가능성이 크지만, 대다수 중동 국가들이 그렇듯 독재정치와 권력층의 부패로 아랍국가 중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 속한다. 국민소득은 1인당 1,500달러에 불과하다.

일찍이 오스만제국의 지배를 받아 오던 예멘을 1839년 영국이 남예멘 지역을 무력으로 점령하면서 비극의 씨앗이 싹튼다. 오스만제국이 1차 대전에 패배하면서 북예멘이 1918년에 독립하여 공화정을 세운다. 1967년에는 남예멘이 소련의 도움을 받아 독립해 공산정권을 수립한다. 다른 체제의 두 세력은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누며 대치에 들어간다. 그러다 1988년 4월 남북 접경 부근에서 유전지대가 발견되자 양측의 지도자가 만나 “싸우지 말고 함께 유전을 개발하자”고 합의한다. 희망적 분위기가 감돌고 내전이 곧 끝나리라는 기대가 커진다. 뜻밖의 황재가 안겨준 선물이었을까? 2년 뒤 정말로 통일을 이룬다. 그러나 권력 배분 방식을

21) 외교부 등 관계기관을 통해 수집한 국가정황 자료 등을 참고하여 편집함



놓고 분쟁의 불씨가 되살아났다. 2011년 ‘아랍의 봄’ 바람이 예멘에 불어 닥치자 불씨가 타올랐고 33년간 예멘을 이끌던 살레 대통령이 2012년 2월 축출되면서 국가 전체가 혼란에 빠진다. 이 과정에서 예멘은 수니파인 하디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군, 시아파인 후티 반군, 수니파 급진주의 무장단체인 알카에다 추종 세력이 장악한 지역으로 국토가 3등분 된다.

2014년 8월 후티 반군이 수니파인 정부군과 대대적으로 충돌하고, 이듬해 1월 반군이 수도 사나의 대통령궁을 점령한다. 그러자 하디 정부군을 지원하는 사우디아라비아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내전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었고 본격적인 국제전 양상도 띠기 시작한다. 표면적으로는 예멘 정부군과 후티 반군 간 충돌이 내전의 중요 축이지만, 중동의 패권 경쟁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개입이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15년 3월부터 공군력을 대거 동원해 반군 점령 지역에 대한 대규모 폭격에 나선다. 또 아랍에미리트(UAE)와 이집트, 수단 같은 수니파 동맹국들과 함께 ‘아랍연합군’을 구성해 이들 나라의 지상군 투입을 독려하고 있다. 반면 이란은 대규모의 무기와 자금을 반군에 지원하는 형태로 맞서고 있다.

2016년 유엔의 중재로 평화협상이 진행됐지만 이내 결렬되었고 2018년 12월 스웨덴에서 다시 평화협상이 재개되었으나 의제마다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 협상에서 최대 격전지인 호데이다 지역에서 휴전하기로 합의했으나 하루 만에 다시 교전이 벌어졌다. 밤사이 계속된 공습으로 휴전 합의 이틀 만에 최소 29명이 숨졌다. 예멘 현지에선 이번 평화협상이 실제 내전 종료로 이어질 유의미한 첫걸음이 되기는 힘들 것이란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후티 반군에 대한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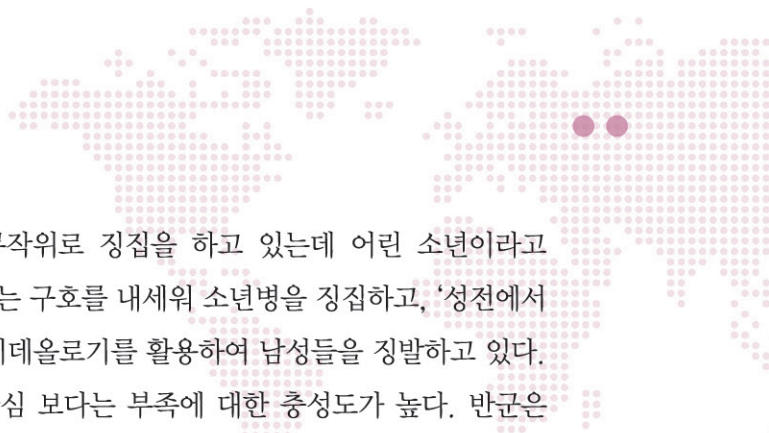
예멘 내전의 두 축을 이루고 있는 세력은 정부군과 반군이다. 정부군은 현 대통령인 하디 정부의 정규군과 사우디아라비아 주도의 아랍연합군을 포함하는 세력이고, 반군은 정부군과 대치하고 있는 무장 세력인데, 단체를 조직한 예멘의 정치인 후세인 알 후티의 이름을 따서 후티 반군이라고 부른다.

후티 반군은 1994년 자이디 시아파를 규합한 종교 운동 단체로 출발하였으나 예멘 정부가 남예멘의 분리운동을 지원하고,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이후 예멘 국내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외세의 영향력이 확대되자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는 예멘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무장단체로 전환했다. 2004년, 예멘 정부에 반기를 들고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단체의 수장인 알 후티가 정부군에 의해 사살되어 단체의 존재 위기를 맞았으나, 2011년 아랍의 봄 사태를 계기로 시위에 조직적으로 개입하면서 세력을 키워나갔다.

2014년 하디 대통령이 예멘을 6개 주로 분할하는 새 연방국 안을 승인하자 후티는 하디와 경쟁관계에 있으면서 정계에 영향력이 막대한 살레 전 대통령의 지지를 등에 업고 수도 사나에 무혈입성 한다. 곧이어 하디 정부를 퇴출시킨 뒤 의회를 해산하고 혁명위원회를 출범시킴으로써 쿠데타에 성공한다.

쫓겨 난 하디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지원을 요청하자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랍연합군을 결성하여 반군에 대한 공습을 개시하면서 내전에 개입한다. 살레와 그의 지지 세력들은 외세의 내정 개입에 저항하며 반군과 동맹을 맺었으나 그리 오래 가지는 못한다. 반군이 점차 점령지를 넓혀가자 그 통제권을 두고 반군과 살레 진영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하더니, 2017년 12월 반군이 살레를 살해함으로써 동맹은 완전히 와해되어 버린다. 살레가 사망하자 그 지지 세력이 반군과 갈라서면서 내분은 격화되었고, 내전이 여러 무장세력 간 대결뿐만 아니라 국제전 성격까지 띠면서 사태는 혼탁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종교 운동으로 시작한 단체가 어떻게 쿠데타에 성공하고 내전의 한 축으로 부상할 수 있었을까? 정치 세력으로 성장하는 데 살레 전 대통령과의 동맹이 발판이 되었다면 그 밑바탕에는 강제 징집으로 강화한 군사력이 있었다. 반군은



2015년 3월 정권을 장악한 후 무작위로 징집을 하고 있는데 어린 소년이라고 예외는 없다. ‘학교에서 참호로’라는 구호를 내세워 소년병을 징집하고, ‘성전에서 사망하면 천국으로 직행 한다’는 이데올로기를 활용하여 남성들을 징발하고 있다. 전통 아랍사회에서 부족원은 애국심 보다는 부족에 대한 충성도가 높다. 반군은 부족장에게 비교적 안전한 검문소 근무를 약속하고 남성을 징발한 다음 약속과 다르게 전선에 투입하고 있는데,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자체 무장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 부족 가운데 반군에 전투병 파견을 거부하는 부족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살레와의 동맹과 강제 징집으로 세력을 강화한 후티 반군은 자체적인 통치기구를 갖춰 나간다. 2015년 결성된 최고혁명위원회는 임시 통치기구로, 최고정치위원회에 권력을 인계한 후에도 현재까지 여전히 활동 중이다. 2016년 7월 출범한 최고정치위원회는 혁명위원회로부터 권력을 인수한 후 예멘 북부를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행정부 역할을 하고 있으나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정부다.

반군이 내전을 일으킨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 반군은 표면적으로는 예멘 영토를 침략한 외세(아랍 연합군)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국민들로부터 전쟁비용을 각출하고 전투원 보충에 부족의 인력을 동원하고 있는데, 통치 권한을 알라로부터 부여받았으며 정권 찬탈의 정당성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현 하디 정부 측 인사들은 반군이 시아파 이맘 왕조를 건설하기 위해 내전을 일으켰다고 주장한다. 들어보자.

“자이디 시아파인 후티 지도자들은 이란에서 유학하면서 이란이 신봉하는 이맘 시아파로 변질되었다. 예멘에 시아파 이슬람 국가를 세운 후 이란과 동맹, 사우디의 메카를 탈환하여 시아파 이슬람 제국의 복원을 꾀하고 있다.”

시아파인 반군은 수니파를 어떻게 대할까? 예멘 내 수니파와 시아파의 구성은 53%와 47%이고 자이디 시아파인 후티 부족은 예멘 국민의 약 3%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자이디 시아파는 이슬람 종파 중 가장 온건한 파벌로, 교리가 시아파보다는 수니파에 가깝다. 예멘 국민들은 후티 반군의 정권 찬탈 이전까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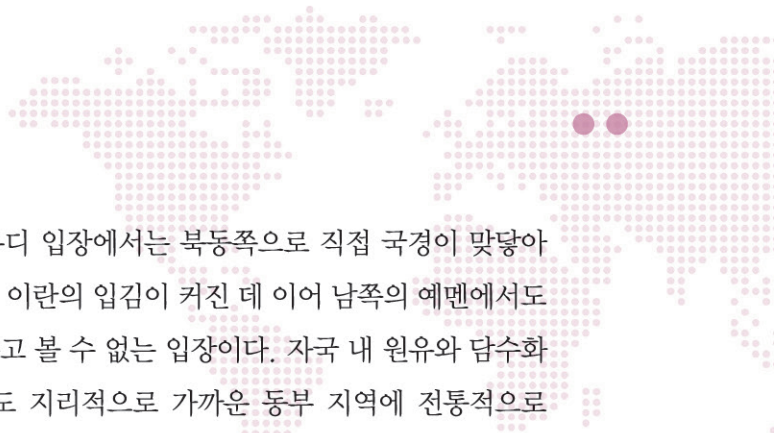
수니파와 시아파의 구분 없이 세속적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상호간에 탄압하지 않는 입장을 견지해 왔던 것이다. 후티 반군도 여타 어느 독재정권과 마찬가지로 후티에 반대하고 저항하는 국민들을 탄압하고 학대하나, 수니파라는 종파를 이유로 학대하지는 않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종파 차이로 예멘 국민들이 위협에 처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왜 싸우고 있나

부패한 권력은 민중의 저항에 부딪치기 마련이다. 아랍의 봄은 독재자를 몰아낸 중동 국민의 정치적 승리다. 예멘도 살레 대통령을 축출하면서 승리를 맛보기는 했다. 그 사이 힘을 키워 온 후티가 정치세력으로 부상하기 전까지는.

예멘에 내전이 일어난 데에는 정치적 갈등 외에도 내외부적 환경들이 얹히고설켜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외부 위협에 취약한 지정학적 위치, 부족주의, 그리고 경제 불안정 요인이 그것이다.

먼저 지정학적 요인을 살펴보면, 중동 전문가들과 외교가 관계자들은 예멘의 지정학적 가치 때문에 사우디와 이란 모두 예멘 내전 개입을 포기하기 힘들다고 입을 모은다. 수니파의 맹주이며 동시에 아랍권 대표주자 격인 사우디와, 페르시아의 후예로 시아파의 대표국인 이란은 오랜 기간 동안 중동 지역의 패권을 놓고 경쟁해 왔다. 두 나라는 주변국에서 자신의 종파를 믿는 정치 혹은 무장 세력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영향력을 키워 왔다. 특히 최근에는 이란의 적극적인 영향력 확대 움직임이 눈에 띈다. 이란은 시리아, 이라크, 레바논 같이 시아파 인구가 다수인 지역에 적극적으로 진출했다. 시리아와 이라크에선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IS를 퇴치하기 위해 자금과 무기 공급은 물론이고 직접 군대를 보내고 현지 민병대를 지원해 대규모 군사 작전까지 벌였다. 레바논에선 남부 지역을 거점으로 대(對)이스라엘 무장 투쟁을 펼치는 시아파계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중동 외교가에선 이란이 시아파 초승달 벨트인 이란-이라크-시리아-레바논으로 이어지는 이란 중심의 동맹 체제를 상당히



진전시켰다는 평가도 나온다. 사우디 입장에서는 북동쪽으로 직접 국경이 맞닿아 있는 이라크와 시리아, 레바논에서 이란의 입김이 커진 데 이어 남쪽의 예멘에서도 이란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는 입장이다. 자국 내 원유와 담수화 관련 시설이 밀집해 있고 이란과도 지리적으로 가까운 동부 지역에 전통적으로 시아파 인구가 많다는 것도 사우디에는 큰 부담이다. 이란의 영향력이 커지면 사우디는 유사 사태가 발생할 경우 사실상 봉쇄되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어 예멘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지역이고, 따라서 국제사회의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강경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내전에는 ‘부족주의’라는 사회구조적 문제가 작용하고 있다. 부족주의가 뿌리 깊은 예멘에서는 부족들이 중무장한 자체 병력을 보유하며 ‘국가 안의 국가’를 구성하고 있다. 도시지역을 제외하고는 중앙정부의 지방 부족세력에 대한 통제력은 사실상 미미한 수준이다. 1,700여 개의 부족으로 이루어져 있는 지방 세력은 자치 형태를 띠고 있어 국가정체성이 매우 약하다. 따라서 부족들과 무장 세력의 결탁 과정에서 정부가 개입할 여지는 거의 없으며, 이들의 관계는 지역세력 간 자치권, 이권 투쟁, 종교적 명분 이용의 요소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최근 산악으로 이루어진 예멘 내에 은신하고 있는 이슬람 과격세력이 범죄 집단과 결탁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외부인이 지방 토착세력의 허가 없이는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점과 테러 활동의 책임을 즉각적으로 공표하지 않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마지막으로 경제 불안정 요인을 빼놓을 수 없다. 2010년에는 미국의 원조 증가와 신규 가스전의 생산 확대에 힘입어 7.7%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2011년 들어서 반정부 소요사태로 인해 성장률은 -10.5%로 급락했다. 2012년에는 재건과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정지출 규모가 커져 재정적자는 GDP 대비 10%로 확대 되었다. 예멘 내전을 틈타 남부에 알카에다 아라비아반도지부가 설립됨에 따라 해외투자 유입이 감소했고, 알카에다 연계세력들이 중부 마리브 주와 서부 해안을 연결하는 송유관 폭발을 수차례 시도하였다. 이러한 사태로 석유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예멘은 수입에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자 세금 인상 조치를 단행하였고, 이에 맞서 국민이 반정부 시위를 일으키면서 내부 분열이 촉발되었다.

내전의 상흔

내전의 골이 깊어지며 원시림, 오아시스, 사막, 바다를 모두 갖추고 있어 아라비아반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나라로 꼽혔던 예멘은 생지옥으로 변했다. 유엔에서는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예멘 내전으로 1만 명 이상이 사망했고 약 30만 명이 예멘을 떠난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엠네스티는 인구의 70%에 가까운 2,000만 명에게 긴급 식량 지원이 필요하다는 분석 보고서를 내놔다. 최근에는 아랍연합군이 국제 구호물자와 수입품의 70~80%가 들어오는 호데이다항을 탈환하고, 이 지역에 대한 통제와 공급을 강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후티 반군은 물론이고 일반 예멘인들에 대한 식량과 의약품 공급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변국들은 대부분 인도적 차원에서 난민을 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예멘 내전이 예상보다 장기화되고 난민 유입이 급증하자 더 이상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분위기다. 요르단은 2016년 2월 난민 수용 능력이 폭발 직전이라며 국제사회의 자금 지원을 촉구했다가 지원 규모가 만족할 만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자 같은 해 10월 국경 폐쇄를 선언했다.

2018년 6월 24일 난민 문제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벨기에 브뤼셀에 모인 유럽연합 16개 회원국 정상들은 서로의 입장차이만 확인했다. 이 회의에서 난민 수용 문제와 관련해 어떤 합의안도 나오지 않았다. 유럽 외부 국경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을 뿐이었다.

서울에 주재하는 한 중동 외교관은 언론사와의 인터뷰¹⁾에서 “현재로선 예멘 내전 사태 해결 방법이 딱히 안 보인다. 제주에 온 예멘 난민들은 유럽, 중동, 동남아 어디에도 머무를 수 없어 온 이들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1) 2018년 6월 23일자 동아일보 “제주 난민 유입으로 돌아본 예멘사태” 기사 내용 중에서



예멘의 미래

예멘인들은 언제쯤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가까운 시일 안에는 어려워 보인다. 게 중동 문제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평화협상 과정을 한번 살펴보자.

내전이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지 않자 국제사회가 중재에 나서고 있다. 2018년 2월 임명된 마틴 그리피스 신임 유엔사무총장 예멘특사가 예멘의 여러 정부 지도부를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유엔안보리에 평화회담 초안을 보고했다. 2018년 6월 사우디 주도 아랍연합군의 홍해연안 호데이다 항구 탈환 작전 전개로 전투가 격화되자, 그리피스 특사는 후티 반군 지도부(사나)와 하디 대통령(아덴) 간 서틀외교를 진행하여 격화된 호데이다 전투 종식과 정치적 대화 시작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유엔은 호데이다 항구 운영권을 유엔에 완전히 이양하는 조건으로 아랍연합군과 후티 반군과의 정전을 촉구했다. 후티 지도부는 사나공항 봉쇄 해제와 중앙은행의 사나 복귀 그리고 아랍연합군의 후티 지도자 표적 공습중단 조건을 제시했으나, 하디 대통령과 아랍연합군은 후티 반군의 조건 없는 완전한 호데이다 철군을 요구하며 반군의 제의를 거부하였다.

2018년 12월, 유엔 중재로 열린 스웨덴 평화협상에서 일부지역 휴전이 합의되었다. ▲남서부의 항구도시 호데이다 지역 즉각 휴전 ▲휴전 개시 뒤 최장 21일 이내에 양측 병력 철군 ▲유엔이 통제하는 공동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정부군과 반군이 악수를 나눴다. 하지만 합의는 합의로만 그쳤다. 다음날 곧바로 공습과 교전을 벌이며 상대방을 향한 적대감을 드러냈다. 공습으로 반군 29명이 숨지고 7명이 잡혀가자 후티 반군은 “침략자(예멘 정부, 사우디)가 합의를 어기면 언제라도 보복하겠다”고 경고했다. 합의서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2019년 1월에 예정되었던 휴전감시단 회의에 반군이 불참하면서 휴전 협상이 삐걱거리고 있는 형국이다. 미국에 본부를 둔 국제구호단체인 국제구조위원회(IRC)는 1월 29일 낸 성명에서 “호데이다 시내에서 친정부 무장조직과 반군 간 전투가 지난주부터 급격히 증가했다”며 휴전 합의가 붕괴하기 직전이라고 우려했다.

예멘 난민들이 재정착하기 위해서는 내전 종식과 경제 안정이 필수적인데, 현재로서는 둘 다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분쟁 당사자인 하디 정부와 후티 반군이 서로 압도적인 승리를 이끌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정치적인 해결방안이 모색되지 않는 한 내전 종식은 요원해 보인다. 세계 최빈국의 하나인 예멘은 2015년 3월 이후 내전 격화로 정부의 기능이 거의 마비되었고, 의료와 보건시설은 대부분 파괴되었다. 예멘 경제는 내전이 지속되는 한 2022년까지 마이너스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외환부족과 정부 예산 적자로 예멘 리알 화폐 가치는 폭락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예멘 난민들의 정상적인 삶 영위를 위한 예멘 내 재정착 여건 조성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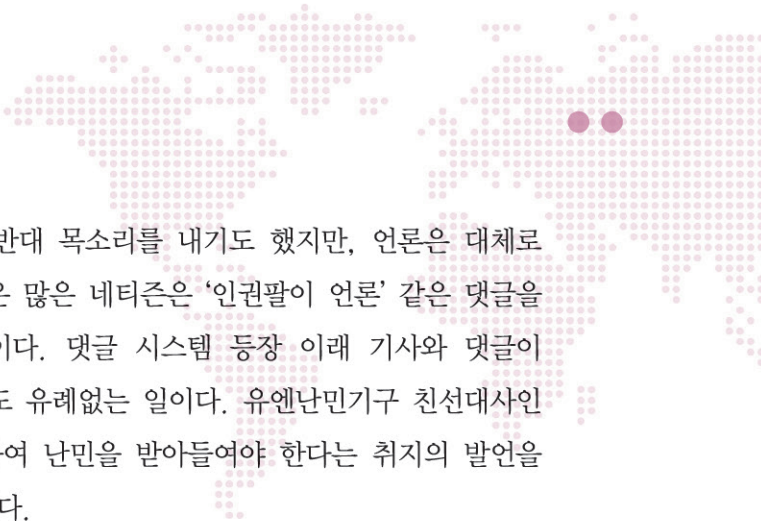
이방인을 마주한 우리의 모습

2018년 상반기를 지나면서 매일 쏟아져 나오는 수십 건의 난민 기사는 다른 사회문제를 압도하였다. 방송 매체에서는 연일 난민 이슈 분석과 토론을 하며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다. 2018년 한 해 우리 사회는 난민 문제로 몸살을 앓았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예멘 난민과 마주한 우리의 얼굴은 어떠했을까? 이방인이 갑자기 찾아와 대문을 두드리며 도와달라고 하면 누군들 당황스럽지 않겠느냐는 이들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은 극명하게 갈렸다. 역대 최단기간 내에 가장 많은 참여자를 기록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난민 이슈에 불을 지폈고, 이를 신문과 방송이 보도하면서 이슈가 확산되었다.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흑백논리도 빠지지 않았다. 이슬람포비아²⁾라는 신조어가 생겨나고 괴담은 진실의 가면을 쓰고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제주도 는 범죄의 소굴이라도 되는 양 무서워서 여행 계획을 취소하는 사람도 생겨난다.

제주지역의 종교계와 시민 사회단체는 예멘 난민들에게 숙소와 생필품을 제공하였고, 다른 일각에서는 난민 반대단체가 가짜 난민 추방 집회를 열었다. 일부 언론이 ‘가짜 난민 못 쫓아내는 글로벌 호구 국가’, ‘재앙이 오고 있다’라는

2) ‘이슬람(islam)’과 싫어한다는 뜻의 ‘포비아(phobia)’가 합쳐진 말로, 이슬람 국가와 이슬람교에 대해 공포를 느끼거나 혐오하는 현상을 뜻한다.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가며 난민 반대 목소리를 내기도 했지만, 언론은 대체로 난민을 옹호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많은 네티즌은 ‘인권팔이 언론’ 같은 댓글을 달아가며 기사를 성토했다는 것이다. 댓글 시스템 등장 이래 기사와 댓글이 이번처럼 대척점에 서 있는 경우도 유례없는 일이다. 유엔난민기구 친선대사인 배우 정우성도 제주포럼에 참석하여 난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네티즌의 못매를 맞기도 했다.

사실 이슬람 난민이 한국을 찾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3년부터 시리아 난민³⁾이 내전을 피해 대거 입국했는데, 지금처럼 사회적 이슈가 되지는 않았다. 예멘인들이 제주도라는 한정된 지역에 갑자기 몰려든 극적인 상황이 발생하자 비로소 이 문제와 마주한 셈이다.

난민이 논란의 중심이 된 것은 500여 명이라는 난민 숫자가 그동안 우리 사회에 ‘있지만 보이지 않았던’ 문제를 가시적인 문제로 만들었기 때문은 아닐까. 하나의 공동체에 이방인이 들어오면 불안감을 초래한다. 갑작스러운 ‘타자’의 방문은 침입으로 느껴지고 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해석될 수 있다.

3) 5년(2012~2016) 동안 1200여명이 들어와 난민신청 했고 대부분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다.

제2장 제주청의 발걸음

제주청장의 달력

‘난민 폭증에 말 못하는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예멘 난민 놓고 정부-인권위 엇박자’, ‘제주무사증 존폐논란’, …….

5월 중순을 넘어서면서 예멘 난민을 다룬 기사가 쏟아져 나온다. 주요 포털 사이트에는 난민 연관어가 실시간 검색 순위 상위에 오른다. 이슬람, 여성, 인권, 테러, 강간, 범죄, 세금, 유럽. 검색 빈도가 높은 단어들은 무슬림 난민에 대한 공포와 불신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난민이 장안의 화제가 되면서 세간의 이목은 제주청으로 쏠렸다. 국민의 요구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다. 도심에서 찬·반 집회가 앞 다투어 열렸다. 제주청을 찾아와 반대 단체는 가짜 난민 추방을, 찬성 단체는 난민 지원 의사를 밝힌다. 예멘 난민 컨트롤타워로 변모한 제주청. 그 역할은 차고도 넘쳐난다.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찬·반 단체 면담, 언론 브리핑, 시민 사회단체 간담회, 업무협약…. 청장의 달력에 빈 칸이 사라졌다.

급선무는 도민 안전 대책 수립. 제주청이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중앙과 지방 정부의 협조를 이끌어 내야 했다. 청장을 비롯한 간부들의 광폭 행보가 시작되었다. 먼저 경찰과 해경을 방문하여 예멘인 숙소와 일터를 중심으로 치안 활동의 범위를 넓히고 강도를 높여줄 것을 요청하였다. 도청과 도의회도 찾았다. 도지사는 자치경찰의 순찰 강화를 약속하였고, 도의장은 제주청과 소통하는데 뜻을 같이 했다. 앞서 도의회는 난민지원 예산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정보·수사기관과도 긴밀히 공조했다. 난민 신청자의 테러단체 연계 여부와 범죄 이력을 검증하여 국내 체류 부적격자를 걸러내지 않는다면 국가적



테러, 범죄 위험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기관 간 협업은 여러 필요조건 중 하나가 될지는 몰라도 충분조건이 될 수는 없다.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부문은 민간의 협조와 참여가 긴요했다. NGO와 여러 사회단체를 만나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같이 뛰었다. 병원과는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민관 6개 기관을 주축으로 난민 대책을 논의하는 특별전담반⁴⁾이 구성되었고, 숙소와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단체, 독지가를 만나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협업에는 민과 관이 따로 없었다.

안전은 말로만 외친다고 될 일이 아니다. 도청, 경찰청과 공동 언론 브리핑을 통해 정책의 방향을 설명하고, 국민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직접 답했다. 자세한 내용은 Q&A 자료를 만들어 배포하였다.

난민심사 방안도 마련했다. 예멘난민 심사 전담창구를 개설하고, 면접실도 추가로 마련하고 심사인력과 통역요원을 보강하여 난민심사팀의 진용을 새롭게 짰다.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다. 제주청은 국내외 정보기관에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 확인에 주력했고, 가용 인력을 최대한 투입하여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였다. 구인·구직 수요를 파악하여 일자리가 필요한 예멘인과 사업주를 연결시켜 주기도 했다. 경찰청은 국민 불안감 해소 방안을 마련했다. 이어 도청에서도 지역사회와 도민 생활안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적십자사는 식자재와 구급약 지원에 나섰고, 수많은 NGO와 민간단체가 구호 활동에 동참했다.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고 하지만, 처음부터 항목별 점검리스트나 일정표가 준비되어 있었던 건 아니다. 그러하기에 시행착오를 완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접근 방법을 찾아 나섰고, 협업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었다.

4) 제주청, 도청, 제주지방경찰청, 대한적십자사제주지사, 도 자원봉사센터, 제주이주민센터

떠돌이의 행로

예멘 내전이 어느 지경에 이르렀기에 이들은 제주까지 오게 되었을까.

예멘 내전은 2015년 3월 이후 격화되었다. 그로 인해 발생한 강제 피난민은 현재까지 약 200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수년간 지속된 내전으로 피해가 상당하지만, 잊힌 전쟁으로 치부되어 왔다. 예멘 내전을 전후로 터져 나온 굶주린 중동 사태에 밀려난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태가 시리아 내전과 IS(이슬람 국가)의 발호다.

2011년 3월 발발한 시리아 내전은 강대국들의 힘겨루기로 비화되어 현재까지 6백만 명 이상이 내전의 참상을 겪고 있고, 5백만 명 넘는 난민이 각국을 유랑하고 있다. UN은 시리아내전을 해결하기 위해 상임위를 여덟 차례나 열었고, 44억불을 추가 지원할 계획도 내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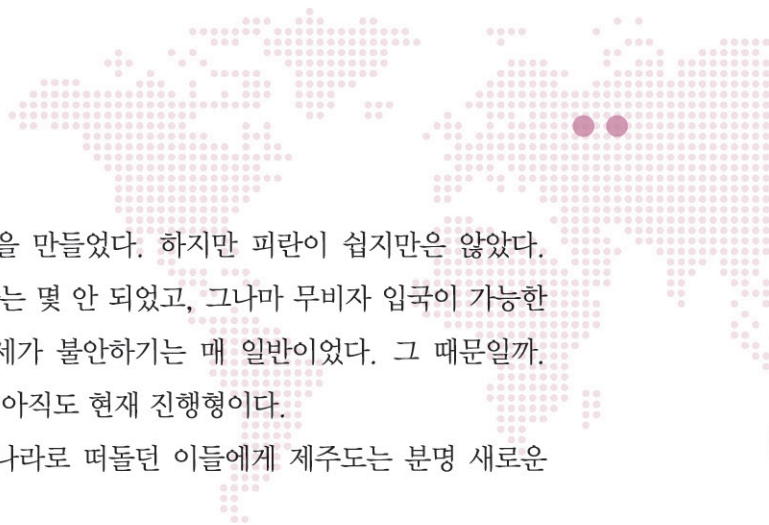
2014년 이라크 최대 유전도시를 장악한 극단주의 무장단체 IS가 '이슬람 국가' 수립을 선포한 뒤 테러와 유적 파괴를 일삼았다. IS는 군인뿐 아니라 민간인을 살해하고, 기자들을 납치해 참수한 뒤 이 장면을 SNS와 인터넷에 공개하는 잔혹성을 보였다. IS의 영향을 받은 이른바 '외로운 늑대⁵⁾'의 테러가 문제되기도 했다.

이에 비해 예멘 내전은 수니파와 시아파의 종파 갈등만으로 비춰져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지 못한 채 끝없는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예멘은 국제사회의 무관심과 열악한 원조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희생자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아동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유엔아동기금(UNICEF)은 예멘 내전 사태 이후 220만 명의 아동이 영양실조 상태에 놓여있고, 이미 50만 명의 어린이가 영양실조로 사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쉽게 계산하면 지구 저편에서 매 10분간 아동 1명이 사망하고 있는 것이다.

예멘 난민신청자들은 예멘이 살 수 없는 곳, 지옥이라고 줄곧 말한다. 그들은

5) 전문 테러 단체 조직원이 아닌 자생적 테러리스트를 이르는 말로, 이들은 극단주의 단체의 이데올로기나 신념에 동조해 자발적으로 테러를 자행한다.



이런 지옥을 벗어나기 위해 여권을 만들었다. 하지만 피란이 쉽지만은 않았다. 비자 장벽에 막혀 갈 수 있는 나라는 몇 안 되었고, 그나마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수단이나 소말리아, 리비아도 정세가 불안하기는 때 일반이었다. 그 때문일까. 힘들게 피란했지만 이들의 고난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이처럼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나라로 떠돌던 이들에게 제주도는 분명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여겨졌으리라.

손에 손잡고

먼 길을 돌고 돌아 제주에 도착했다. 대한민국은 인권의 나라라고 한 목소리로 칭송하는 예멘 난민신청자들. 과연 제주 도민의 환대를 받을 수 있을까.

제주청의 출도제한 조치로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없게 된 이들이 제주에 본격적으로 터를 잡기 시작한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든다. 출도제한 조치 이후에 입국한 이들은 그런 사실을 모르고 왔을까? 4월 말 이후 공항에서 회부 심사한 사람들에게 출도제한 내용을 고지하면 “그럼 언제 나갈 수 있느냐?”부터 물어본다. 예멘인들의 SNS를 통한 소식 전파가 얼마나 빠르고 조직적인지는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알고 왔다는 얘기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든 ‘제주에 갇힌 예멘 난민’의 제주 정착 생활이 시작되었다. 시선이 곱지 않다. 예멘 난민은 대한민국의 핫이슈로 급부상했고, 유럽의 무슬림 난민 사건이 부각되면서 반난민, 반이슬람 정서가 확산되었다. ‘이슬람포비아’가 빠르게 퍼져나갔다. 언론이 나서서 정부의 미흡한 대책을 지적하고, 난민 신청자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한다.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국적의 무슬림 난민신청자들도 예멘인을 외면하기에 이른다. 이태원에서 아랍식당을 운영하는 이집트인, 이라크인은 반이슬람 정서 탓에 손님이 큰 폭으로 줄어 가게가 문 닫을 지경이라며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들을 긴급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정부차원의 대책이 나와야 할 시점이다. 제주청장은 도청과 경찰청 관계자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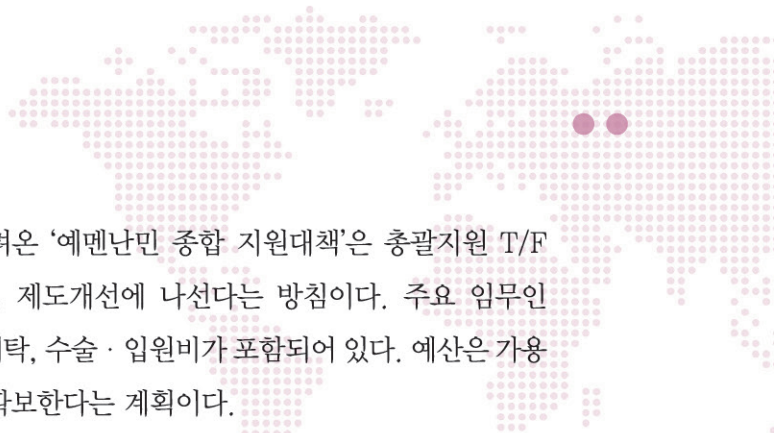
만나 협의한 끝에 도민 안전대책을 마련, 6월 19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청장은 난민협약과 난민법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하게 난민 심사를 진행하고, 취업과 한국 문화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통역 서비스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생계비 지원 현황과 출도제한 조치 배경에 대해 설명하며 SNS에 떠도는 잘못된 정보와 오해를 바로잡았다.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브리핑을 통해 3개 기관이 순찰 강화와 애로사항 해소에 노력하여 도민의 불안과 걱정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예멘인이 제주에 체류하는 동안 숙소와 의료비 지원도 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 경찰청 외사과장은 예멘인 숙소 주변과 주요 도로, 유흥가를 중점적으로 순찰해 도민 불안감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이틀 뒤, 먼저 경찰에서 종합대책을 내놨다. ‘국민 불안감 해소 및 인권 보호 종합대책’이다. 제목에서 보듯 대책은 두 갈래다. 예멘인 숙소주변 범죄예방 활동 강화와 국내법 교육, 강력범죄 신속 검거체계 구축으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아랍어 신고요령 안내문 제작과 고용주 대상 교육을 실시하여 인권을 보호한다는 방안이다.

며칠 후, 원희룡 도지사가 제주청을 찾았다. 도지사는 난민 신청자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신속 정확한 심사를 진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도민의 불안을 최소화하는데 도정이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도 했다. 또한 7월 출범하는 도의회에 예멘 난민 현안을 선제적으로 설명하자는 제안도 하였다. 청장은 도청의 지원과 협조에 감사하면서, 심사인력을 증원하여 조속히 난민심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고 체계적인 난민관리를 위해 도청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지사는 제주청을 다녀간 다음날 예멘 난민 종합대책을 세워 알려왔다. 같은 시각 청장은 언론인들을 앞에 두고 있었다.

제주청은 본청 대강당에서 언론인을 상대로 브리핑을 개최했다. 난민 피담이 횡행하고 잘못된 정보가 넘쳐나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었다. 청장은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심사 기준을 재차 언급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일일이 답하며 심사대상, 심사절차, 출도제한사유를 설명하였다. 청장과의 일문일답은 곧바로 인터넷 신문에 올라왔다. 언론에 제주청의 난민심사 기준이 거듭 강조되고 있었다.



6월 25일 도청이 공문으로 알려진 ‘예멘난민 종합 지원대책’은 총괄지원 T/F 팀을 구성하여 구호와 취업 지원, 제도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주요 임무인 재정지원에는 생필품, 이·미용, 세탁, 수술·임원비가 포함되어 있다. 예산은 가용 재원을 우선 쓰고, 추경예산에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6월 28일 민관 6개 기관으로 구성된 예멘난민 특별전담반이 도청 회의실에 마주앉았다. 제주청은 조사과장이 참석했다. 제주청의 취업설명회에 지원과 협조, 자원봉사단체를 활용한 인도적 지원활동, 긴급구호를 위한 의료비 지원, 도민 안전을 위한 순찰 강화 등 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치안 강화를 위한 대부분의 의제를 다뤘다.

다음날인 6월 29일, 주무부처인 법무부에서 공식 대책을 내놴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긴급 언론 브리핑을 개최하여 ‘제주 예멘난민 관련 법무부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네 가지다.

첫째, 제주청에 직원⁶⁾을 추가 투입해 심사기간을 2~3개월로 대폭 줄인다.

둘째, 단순 체류기간 연장 등 난민제도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난민법 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셋째, 공정하고 신속한 난민심사 인프라를 구축하여 진정한 난민은 보호하고 허위 난민신청자는 신속하게 불인정한다.

넷째, 난민신청자에 대한 통역지원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난민인정자가 우리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교육 강화 및 멘토링 시스템을 도입하겠다.

아울러 당부도 잊지 않았다.

“법무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니 사회 각 부분에서 관심과 지혜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항과 관련해 지나친 온정주의 혹은 과도한 혐오감을 보이는 것은 모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6) 6월 25일 아랍어 통역직원 2명 지원. 7월 2일 난민심사관 4명, 아랍어 통역직원 2명 추가 지원.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질의응답에 나섰다.

“보호가 필요한 진정한 난민은 신속히 보호하고, 체류연장과 취업 목적으로 난민 신청한 자는 빨리 걸러내겠습니다.”



법무부차관, 제주 예멘난민 대책 기자회견
(2018. 6.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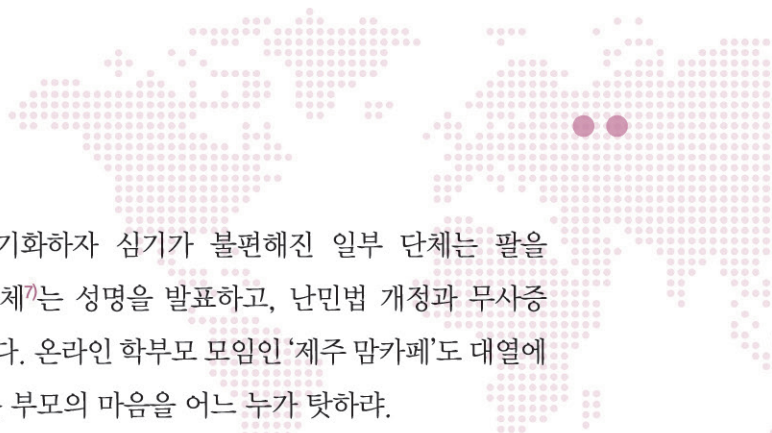
본부장, 제주 예멘난민 대책 기자회견
(2018. 6. 29.)

법무부의 기자회견과 제주청의 다방면의 활동, 관계기관의 인도적 지원과 치안 강화, 중앙과 지방의 연이은 대책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난민 반대 여론은 좀체 수그러들지 않았다. 여기에 더해 제주에 등지를 튼 500여 명의 장기 체류가 새로운 이슈로 떠올랐다.

거리의 부랑아

2018년 5월로 제주 무사증입국 제도가 만 16년을 맞았다. 2002년 5월 ‘제주 특별자치도법’에 따라 제주 무사증입국 제도가 시행되면서 제주의 산업지형도가 바뀌어 갔다. 제주관광공사 통계에 따르면 제주는 3차 산업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13% 높은 73%에 이르렀다. 2008년 이후 서비스업 매출 증가율도 전국 평균 1%의 두 배를 상회하는 2.6%에 달했다. 무사증 제도가 관광객을 끌어 들이면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고, 그들이 쓰고 간 돈이 제주에 흘러들면서 제주 발전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무사증 입국자들이 불법체류하고 범죄를 저질러 가뜩이나 불안한데 난민신청까지 하고 있다며 외국인 관리 소홀을 지적하는 이가 많고, 아예 무사증 제도를 폐지해 버리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예멘인들의 제주도 체류가 장기화하자 심기가 불편해진 일부 단체는 팔을 걷어붙였다. 도내 6개 난민반대단체⁷⁾는 성명을 발표하고, 난민법 개정과 무사증 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온라인 학부모 모임인 ‘제주 맘카페’도 대열에 합류했다. 자녀의 안전을 지키려는 부모의 마음을 어느 누가 탓하랴.

한편, 출도가 제한된 예멘인은 숙박비가 저렴한 호텔을 찾아 떠돌았다. 이들은 본국과 타국에서 일해서 모아온 쌈짓돈을 체류 경비로 지출하고 있었으나 날이 갈수록 주머니가 비어갔다. 건장한 젊은 남성들 일부는 돈을 아끼려고 숙소에서 나와 공원과 해변에서 노숙을 시도했다. 제주청에 3~4차례 노숙신고가 접수되었다.

6월 7일, 제주청은 예멘인들이 노숙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과 함께 현장에 출동했다. 제주시 신산공원에서 예멘인 7명이 텐트를 치고 있었다. 텐트를 철거하고 숙박업주의 협조를 얻어 원래의 숙소로 다시 입실시켰다.

6월 11일, 이번에는 함덕 해수욕장이다. 난민인권센터의 제보를 받고 직원들이 현장에 출동했다. 예멘인 15명이 해수욕장 야영장에 텐트 2동을 치고 있었다. 이들도 역시 숙박비가 없다고 말한다. 원래 묵고 있던 호텔로 데려가 업주의 양해를 구해 다시 입실 조치했다.

예멘인의 노숙을 방치하면 도민 불안 요소가 될 수 있었다. 돈이 떨어진 노숙자들이 행인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다면? 노숙자들이 무서워 마음껏 다니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면? 노숙 문제 해결이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제주청의 고심이 깊어갔다. ‘예멘인의 범죄환경 노출 차단’과 ‘도민 안전 확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묘안을 짜내야 했다.

우선 숙박업소들을 찾아가 예멘인이 임시로 거처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했다. 숙박비는 이들이 취업하여 받은 임금으로 정산하거나 예멘인 고용주가 해결해 주기로 했다. NGO 단체에도 협조를 구했다. 제주이주민센터와 천주교구 이주사목센터 등 여러 단체에서 숙소 해결에 발 벗고 나섰다. 당시 천주교구 이주사목센터는 가족과 여성 위주로 숙소를 제공하고 있었다.

7) 제주도 난민반대단체: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 나라사랑어머니회 제주지부, 사랑의 재능 기부회, 바른 인권 국민대연합, 우리문화사랑 국민연대, 한국 난민신청자 외국인대책협회

제주청은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았다. 바로 조기 취업 허가다. 난민신청자는 6개월이 지난 경우 취업 가능하지만, 그 전에 취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자는 것이다. 일터에서 숙식을 제공한다면 예멘인은 돈도 벌고 숙식도 해결할 수 있으며, 제주청은 노숙 문제와 도민 불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방안을 구체화한 것이 취업설명회다.

취업설명회

제주청 접수창구는 난민신청자들로 연일 장사진을 쳤다. 일거에 들이닥친 500여 명의 예멘인들은 이제 제주청이 그들의 피난처라도 되는 양 갖가지 사연을 들고 찾아와 도움을 청한다. 난민심사에 족히 수개월은 걸릴진대, 이들의 여비가 바닥나고 있으니 특단의 조치를 결행해야 할 때가 왔다.

취업설명회 날짜를 잡았다. 6월 14일과 18일로 정했다. 예멘인의 숙소마다 찾아다니며 소식을 전하고 참여를 독려했다. 취업설명회 안내문을 만들어 호텔과 적십자사, NGO 단체에 배포하고 페이스북(Yemen Refugees in Jeju)과 사회통합프로그램 밴드에 게시했다. 수협과 양식업, 요식업 협회에도 알렸다.

6월 14일, 1차 취업설명회.⁸⁾ 예상의 두 배에 달하는 400여 명의 예멘인이 참석했다. 사업주의 참석 인원도예상을 뛰어넘었다. 수많은 인파에 언론의 취재 열기까지 더해 현장은 후끈 달아올랐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번호표를 배부하여 100명 단위로 강당에 입장시키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이들에게는 질서보다 들어가는 게 우선이었다. 일시에 300여 명이 몰려들어 강당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제주청이 가용 인력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질서를 잡은 다음에야 비로소 설명회를 시작할 수 있었다. 오전에 한국문화 이해와 고용계약서 내용을 설명하고, 오후부터 구인·구직자가 마주하는 시간을 갖게 했다.

설명회 결과 양식장과 수협에서 채용하겠다고 250여 명⁹⁾을 데리고 갔다. 그러나 그날 저녁부터 예멘인들은 ‘조건이 안 맞다’, ‘기숙사가 마음에 안 든다’며 제주청에

8) 난민인권센터, 제주이주민센터 등 도내 여러 인권단체에서 설명회를 참관한 가운데 대한적십자사에서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글로벌이너피스에서 1회분의 부식을 제공함.

9) 00수협 130명, 어선원 124명(00수협 84명, 00수협 40명), 비료공장 3명

불만을 쏟아냈다.

6월 18일, 2차 취업설명회. 예멘인 220여 명이 참석했다. 두 번 참석한 사람도 있다는 얘기가. 일터는 요식업 위주로 주선하였다. 1차 때 질서유지가 되지 않았던 문제점을 보완하여 출입자 통제에 힘을 썼고, 계약 체결 방식도 대면 면접으로 바꾼 결과 진행이 그전보다는 매끄러웠다. 1차에 참석하여 취업했던 상당수가 다시 와서 재취업을 요구하기도 했으나 대상자가 너무 많아 이들은 제외하였다. 그 결과 130명이 사업주를 따라 갔다.

두 차례의 취업설명회를 통해 예멘인 380명이 사업주와 연결되었다. 그러나 모두가 성공적으로 취업한 건 아니다. 사업주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제주청에 체류 자격외 활동허가를 신청한 사람은 270여 명에 그쳤다. 나머지는 며칠 일하다 근로 계약을 맺기 전에 그만두거나 취업을 포기했다.



1차 취업설명회 (2018. 6. 14.)



2차 취업설명회 (2018. 6. 18.)

취업 주선은 내국인 일자리 잠식 우려가 없는 1차 산업 중에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업종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이번 조치로 일자리를 구한 사람들은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고용주가 숙식을 제공하니 길거리에 나앉을 일도 없다. 취업에 따른 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청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예멘인이 취업을 통해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예멘인에 한해 제한적으로 취업 허가를 해주고 있고, 중도에 일을 그만두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취업설명회는 구인·구직자를 연계하는 데 수치적인 성과를 냈다. 하지만 중도에 그만두거나 설명회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 이들의 취업과 재취업 지원 방안이 필요했다. 개별 구직자인 만큼 성격상 NGO 단체로 창구를 옮기는 게 효과적일 터. 제주이주민센터에 바통을 넘겼다. 6월 21부터 개별 구직자는 이주민센터에서 취업을 돕기로 했다.

뒷손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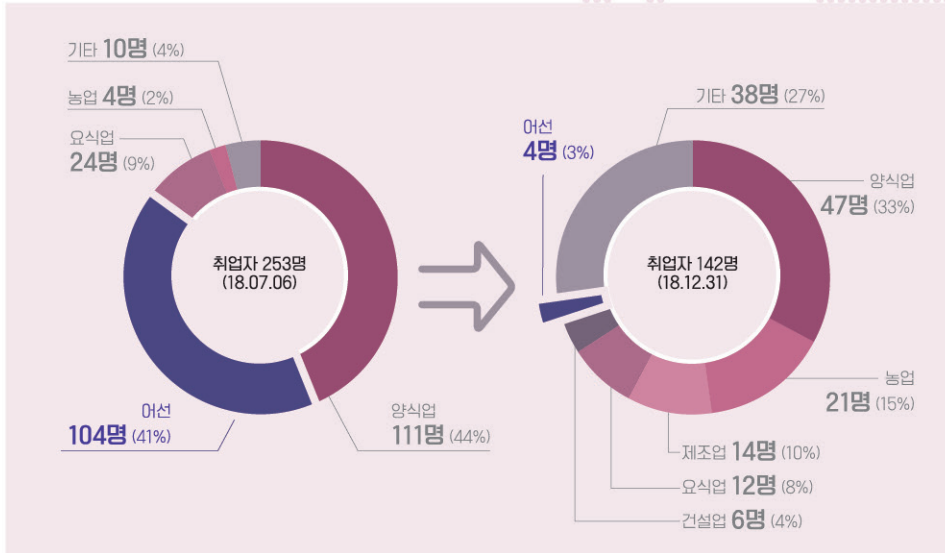
취업한 예멘인들. 일 잘하고 있을까? 많은 이들이 그만두었다. 설명회 직후 270명이던 취업자는 2주 뒤 239명으로 줄었다. 1개월 뒤에는 더 줄었다. 날이 더해가면서 200명 정도가 일자리에 안정적으로 적응했다.

설명회를 후원한 수협과 양식업협회는 선주와 양식업자의 민원에 시달렸다고 한다. “어른을 보고도 인사하는 법이 없다”. “일이 힘들다고 또는 기도한다고 말없이 사라지지를 않나, 반찬이 어찌니 까탈을 부리지 않나”. 여러 사업장에서 부정적인 기류가 포착되었다. 이런 불만들이 언론에 흘러들어갔는지, ‘국가에서 예멘인을 양식장과 어선에 떠맡겼다’는 보도가 나왔다.

원인이 뭘까? 문화적 차이와 예멘인 국민성이 크게 작용했다. 설명회 때 한국 문화를 안내하고 책자도 나눠주었다. 그런다고 들어주고 봐 줄까.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구직자들에게 한국 문화 어찌고 백날 외쳐봐야 쇠귀에 경 읽기였다. 초기에 일을 그만 둔 사람은 다 이유가 있다. 문화적 차이를 극복 못한 탓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이다. 제주청은 다시 교육에 들어갔다. 이번에는 예멘인만이 아니라 고용주도 함께 교육을 했다. 한 쪽만 해봐야 말짱 도루묵이라는 걸 경험삼아, 상호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주력했다. 그 결과 사업장에서의 불만은 확연히 줄었다.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를 보인 곳은 바다다. 7월 초 104명이던 어선원 취업자는 7월 말 69명으로 줄어들더니, 연말에 이르자 단 4명만이 그물을 던졌다. 전멸하다시피 했다. 남은 4명이 대견할 정도다.

그림 1 취업자 변동 추이



예멘은 홍해와 아덴만을 가로지르는 1,900km 해안선을 가진 나라다. 바다에 친숙한 국민이니 뱃일도 잘할 거라 예상했다. 물론 보기 좋게 빛나갔다. 출신지까지 챙겼으면 좀 나았을까? 대부분 해안으로부터 200km 떨어진 수도 ‘사나’에서 왔다. 이들은 한 번도 어업과 인연을 맺은 적이 없었다. ‘타이즈’나 ‘이브’도 마찬가지다. 내륙 출신들은 바다의 사나이가 되어 돌아온 게 아니라, 울렁이는 파도에 시달려 구토만 했다면 지옥에서 살아 돌아오거나 한 것처럼 진저리를 친다. 이들 때문에 선장은 조업을 포기하고 배를 돌렸다.

양식업과 요식업은 어업보다 사정이 다소 나은 편이다. 뱃일을 그만둔 뒤 식당으로 옮긴 한 예멘인은 이렇게 말한다.

“오랫동안 바다 위에서 일하는 뱃일과 달리 식당은 일이 끝나면 친구들과 자유롭게 만날 수 있고, 업무강도와 숙소, 식사 면에서 어업보다 훨씬 나아요. 다시는 바다로 가고 싶지 않아요.”

고용주의 입장은 어떨까. 선주는 예멘인들 때문에 학을 뗐다고 말한다. 식당 업주는 예멘인이 고객과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식자재 나르기와 청소, 잡일밖에

시킬 게 없다고 한다. 사업주들은 예멘인이 기도 시간(살라)¹⁰⁾만 되면 사라지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불편했다고 입을 모은다.

취업설명회 이후 바통을 넘겨받은 이주민센터는 고용을 희망하는 업주와 새 일자리를 원하는 예멘인을 중개하였다. 제주청 아랍어 특채직원과 도청의 아랍어 자원봉사자는 통역 지원을 하며 이들을 도왔다. 재취업의 길이 다시 열리자 제주청 민원실은 고용변동 신고를 하는 예멘인들로 북적거린다. 구직 기간 동안 예멘인은 숙소와 근무처를 일주일도 안 돼 옮겨 다니곤 했다. 그럴 때마다 고용변동 신고를 받으려니 체류 업무가 마비될 정도다. 획기적인 체류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여기서 절묘한 한 수가 나온다. 6월 중순, 청장이 뭔가를 주문한다.

“아랍어 통역직원을 붙여 줄 테니 잘 의논해서 페이스북을 만들어보세요.”

아랍어 특채 직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랬더니 금방 만들어서 캡처한 사진을 보내온다. 며칠 후 이 직원이 제주청에 지원근무를 오면서부터 페이스북을 활용한 예멘인 관리시스템 구축에 들어간다. ‘예멘 난민을 위한 제주청 페이스북’은 이렇게 개설되었다. 정식 명칭은 ‘Jeju Immigration Service for Yemen Refugees’이다. 6월 27일 공식 오픈하였다.

당초 페이스북을 만든 이유는 핫라인 가동이다. 예멘인들과 직통했다. 24시간 연락체계를 갖추어 예멘인의 현재 상황을 즉시 파악해 나갔다. 전체 공지와 안내가 필요한 사항도 신속히 전달했다. 예멘인들은 어려움을 건의하는 통로로도 이용하였다. 그 전에는 일일이 전화로 연락 했다.

만들어 놓고 보니 써먹을 데가 많다. 민원 혼잡을 해소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했다. 핵심은 절차 간소화다. 예멘인들을 제주청 페이스북에 가입시킨 다음 숙소나 근무처를 옮기면 페이스북에 올리도록 했다. 운영자는 페이스북을 확인하여 일일 현황 자료를 만들어 유지했다. 누가 어디서 일하고, 어디서 묵는지 한 눈에 들어

10) 살라: 하루에 다섯 번(해 뜨기 전, 정오, 오후, 해가 진 후, 자기전) 몸을 깨끗이 하고 메카를 향해 행하는 이슬람의 예배로 무슬림의 다섯 가지 의무 중 하나다. 독실한 무슬림은 살라 시간이 되면 하던 일을 멈추고 기도를 드린다.

왔다. 나중에 일자리와 숙소가 안정되면 제주청에 방문하여 신고하면 되니, 민원실 혼잡을 줄이면서도 체류관리는 분명해졌다.

7월 초, 16명의 체류지가 분명하지 않아 페이스북 가입자들을 통해 그들의 위치를 대충 파악한 다음 현장으로 실사를 나가 소재를 파악하였다. 페이스북을 통한 체류지 현행화와 현장 실태조사 병행으로 7월 중순 이후 소재 불명자는 모두 소재 분명자가 되었다. 이후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페이스북은 지금도 계속 운영하고 있다.



예멘난민을 위한 제주청 페이스북(6월 27일 개설)

7월에 접어들면서 미취업자들의 숙소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당시 취업설명회나 개별구직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이 100여 명에 이르고 있었다. 어린 자녀가 있거나, 신체장애로 고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어선, 양식장에 취업했던 이들은 며칠을 버티지 못하고 대량 퇴사하기 시작해 7월 초부터 일정한 거처 없이 옮겨 다니는 사람이 200여 명에 달했다.

NGO 단체에 협조를 구했다. 대표적인 단체가 제주이주민센터와 천주교 나옴센터다. 이주민센터¹¹⁾는 창고로 사용하던 구 제주이주민센터를 개조하여 예멘인들에게 숙소로 제공했다. 그 밖에 취업 지원, 한국어 교육, 문화행사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다. 천주교구 이주사목센터(나옴센터¹²⁾)는 제주도 내 10곳의 주거지를 임대해 가족 단위의 예멘인에게 숙소를 제공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국사회 적응 교육도 하고 있다.

NGO 단체 외에도 00호텔, 00업체, 00펜션, 00교회, 국악연습실에서 개인적으로 숙소를 무료로 지원해주었다.

제주청은 예멘인 체류실태 점검 차 정기적으로 NGO 단체를 방문했는데 이주민 센터는 취업 정보를 얻으러, 나옴센터는 식자재를 얻으러 온 이들로 늘 붐볐다.

민간의 숙소지원 현황을 정리해 보았다.



제주이주민센터 전경

11)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유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상담, 의료지원, 국제협력 사업 진행

12) 천주교구에서 운영하는 센터로, 소외층 외국인을 위한 복지 지원과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

그림 2 단체·개인 숙소지원 현황 (7월 1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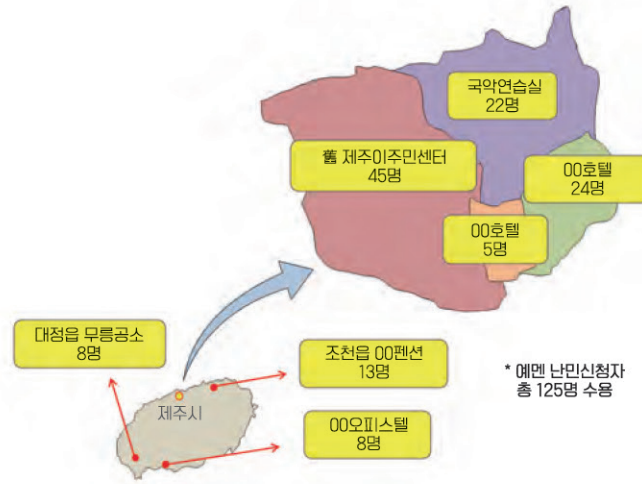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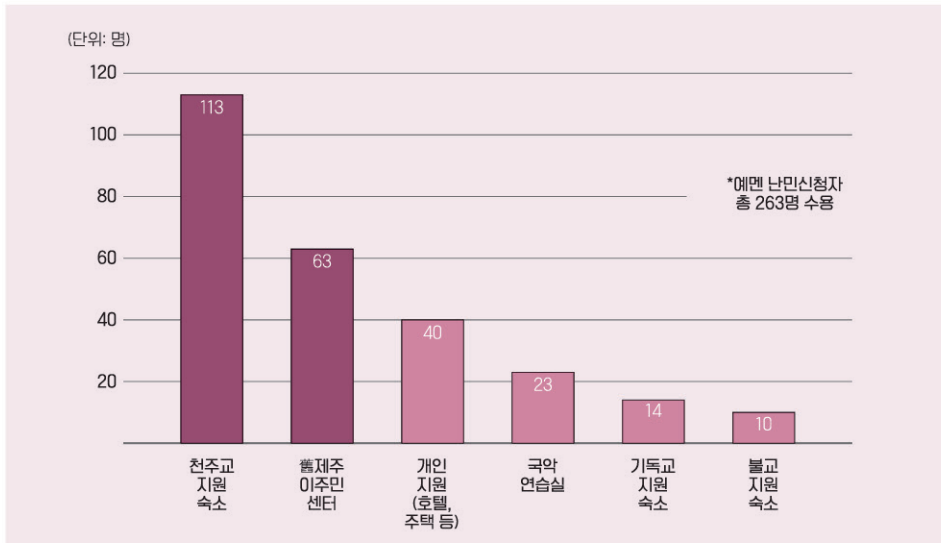


그림 3 단체·개인 숙소지원현황 (8월 1일 기준)



가보지 않은 길

유명인의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관심을 끌듯,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예멘인들의 움직임은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었다. 물론 제주청도 이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관리했다.

예멘인의 생활반경이 점차 넓어져 갔다. 7월 초 17곳이던 거주지가 8월 들어 NGO 단체와 독지가의 후원에 힘입어 36곳으로 늘어나고, 장소도 제주 전체로 확산되었다.

예멘인 주거단지가 형성되자 이웃 주민들이 반발했다. 생김새도, 문화도 다른 젊은이들의 출현에 인근의 학부모와 주민들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않았다. 정부가 난민을 옹호하고 불법고용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부터, 예멘인 숙소 앞에 와서 경비를 서라는 요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민원이 분출했다. 묵과할 수 없는 요구다.

제주청은 예멘인 거주지와 취업 장소를 중심으로 실태 파악에 나섰다. 특히 예멘인 단체 거주지는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실태를 파악하였다. 5명 이상이 새로 입주한 숙소는 빠트리지 않고 찾았다. 이런 곳은 민원의 현장이기도 했다. 대표적인 사례 두 건을 소개한다.

사례 1 학군에 동지 든 예멘인

7월 초, 제주청의 레이더에 제주시의 한 숙소가 포착되었다. 이 지역은 사방으로 학교가 들어서 있고 학생문화원과 도서관에 학원까지 밀집한, 서울로 치면 강남8학군 급이다. 여기에 예멘인들이 동지를 틀었으니, 7월 6일, 동향조사팀을 꾸려 현장으로 출동했다. 수집한 정보는 사실이었다. 무슬림단체에서 개인주택을 임대하여 예멘인 8명에게 숙소로 제공하고 있었다. 예멘인들을 만나고 나오는 순간, 인근 주민 5~6명이 달려들어 차를 가로막았다. 학군에 무슬림이 웬 말이나! 당장 다른 데로 퇴거시키라는 것이다. 요구는 강력했다. 경찰과 합동으로 숙소 일대 순찰, 치안활동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사과장과 아랍어 통역직원의 연락처도 남겼다. 예멘인과의 다툼이나 물리적 충돌, 기타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기면 연락 하라고, 그런 뜻이었는데, 이제 휴대폰이 민원의 통로가 되었다. 퇴거 요구는 일관되고 씬 없다. 제주청은 무슬림단체에 주민의 요구를 전하고, 단체의 입장도 들었다.

사건 발생 1주일 후 무슬림단체는 숙소를 다른 곳으로 옮겼다.



사례 2 버스기사의 이유 있는 항의

제주이주민센터는 옛날에 쓰던 사무실을 개조하여 쉼터로 만들었다. 예멘인에게 임시 거처로 제공하기 위해서다. 시외버스터미널 바로 뒤에 있는 2층 건물로 1층은 버스기사 휴게실이고, 2층이 舊 제주이주민센터다. 상가지역으로 일반주택은 가까이 없다. 쉼터가 모양을 갖추면서 7월 초부터 예멘인들이 속속 입주하기 시작한다. 60명 수용 규모에 점차 인원이 채워져 간다. 민원이 생긴다. 이번에는 버스기사다. 시끄럽고 생활에 방해가 된단다. 기사들이 자주 드나들면서 건물 입구 주차장을 기사들 차가 점령했다고 불만을 터트린다. 예멘인들이 몰려 있어 범죄 위험이 높다고도 한다. 제주청은 센터와 머리를 맞댔다. 센터에서 예멘인 생활규칙을 세우고 관리 인력을 두기로 했다. 건물 입구에는 '기자 방문 사절'안내문이 나붙었다. 경찰, 도청과도 협의했다.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치안에 만전을 기하기로. 제주청은 센터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한국 생활을 안내하고 계도했다.

다행히 이러한 조치 이후 예멘인의 입주는 계속 되었으나 민원은 잠잠해졌다.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이 이어지는 가운데, 난민 반대단체도 행동에 나섰다. 7월에만 두 차례 집회를 열었다. 제주시청 광장과 시내 중심가에서 가두 행진을 벌이며 난민법과 무사증 폐지를 촉구했다. 영향을 받은 탓일까. 예멘인 구인 수요가 하루 1~2건으로 대폭 줄었다. 난민을 돕는 차원에서 예멘인을 고용한 업주들 일부도 이들의 근무행태 때문인지 난민 반대 입장으로 돌아선다.

제주청은 이런 기류를 감지하고 문화 차이에서 비롯되는 오해를 해소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고용주와 예멘인 양 당사자를 대상으로 이슬람 문화와 한국 문화 교육을 다각도로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예멘인을 고용한 사업주들에게 교육 참석을 요청했다. 선주들은 기상 악화로 조업을 나갈 수 없는 날을 택하여 제주청으로 와 주었다. 많은 수는 아니지만 참석자들에게 이슬람 문화와 예멘 상황을 설명하고 궁금해 하는 내용은 자세히 안내해 주었다.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교육 내용을 USB에 담아 우편으로 송부해 주기도 했다.

다음은 예멘인들 차례.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5회에 걸쳐 한국 문화를 교육하는 시간을 가졌다. 내용은 한국 기본예절, 한국 근로문화, 출입국관리법과 기초 법질

서로 구성했다. 참석자들이 구호품과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한적십자의 지원도 요청하였다.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진행한 교육에는 총 228명이 참석하였다.



한국 문화·법질서 교육 (2018. 7. 20.)

그밖에 제주도청은 예멘난민에 대한 궁금증을 정리한 Q&A 자료를 배포하였고, 제주이주민센터는 미취업자 90여 명을 대상으로 제주 문화체험 행사를 가졌다. 이 행사에는 제주청 사회통합위원들이 자원봉사자로 나섰다.

한편, 취업지원도 계속 되었다. 제주청은 수협에 예멘인들의 육상 근무가 가능한지 타진하였다. 어선 취업자들의 이탈이 가속화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수협은 고기 선별이나 그물 수리, 기타 잡일에 인력이 필요하다고 했으나 선주들이 난색을 표하는 바람에 고용은 소규모에 그쳤다. 인권단체에서는 채소 재배 비닐 하우스와 과수원에 일자리를 알선하였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그만둬 버린다.

미취업자들은 NGO 단체에서 마련한 숙소에서 지내며 여기저기 들락거렸고, 200여 명의 취업자들은 안정적으로 생업을 이어갔다. 8월 말 취업자 209명, 미취업자는 255명을 기록했다.

이 모든 일에는 중앙과 지방이 따로 없었다. 지역단체는 존재감을 입증하고 있었다. 예멘 난민이 제주청만의 사안이 아니라는 건 날이 갈수록 분명해져갔다. 법무부에서 소매를 걷어 붙였다. 정책을 점검하고 유효적절한 방안을 내놓았다. 정책 현장 방문도 잇따랐다.



법무부차관, 제주시청 방문 (2018. 7. 10.)



법무부차관, 제주이주민센터 방문 (2018. 7. 10.)

7월 10일, 법무부차관이 제주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김오수 차관은 제주청을 방문하여 난민 심사 진행상황을 보고 받고, 난민법과 난민협약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심사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제주시청을 방문해 원희룡 도지사와의 면담 시간을 가지며 예멘인 취업과 숙소, 의료 지원 방안을 논의하였다. 제주경찰청을 찾아서는 도민 불안 해소를 위해 순찰 강화와 범죄 예방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제주이주민센터에서는 예멘 난민신청자 3명을 만나 애로와 건의사항을 들었다.

9월 27일, 이번에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제주를 찾았다. 제주시청을 방문해 예멘인 관련 현안을 논의하고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제주이주민센터와 나옴센터를 찾아 그간의 노고에 감사하고, 예멘인과 면담하는 시간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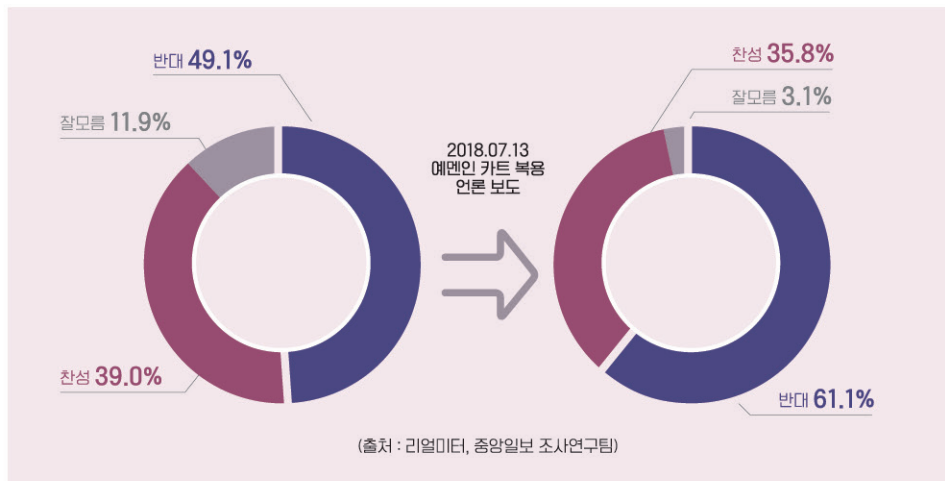
출입국·외국인본부장, 제주 도지사와 난민문제 논의 (2018. 9. 27.)

체류 부적격자

예멘 난민 수용 여부를 놓고 찬반 논란이 한창이던 7월 중순, 언론 보도¹³⁾ 하나가 물길을 바꿔놓았다. 한 신문사에서 예멘 남성이 마약성 기호식품인 ‘카트(khat)¹⁴⁾’를 국내에 반입하여 섭취했다는 보도다. 예멘 난민신청자 1명이 2017년 카트 상당량을 섭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체포되었다는 내용이다. 남성 90%가 현지에서 카트를 즐긴다는 소식도 함께 전했다. 카트는 예멘의 식량난을 가중시키는 병폐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환각성 작물 재배에 많은 물과 경작지를 쓰고 있기 때문이다.

보도는 큰 파장을 일으켰다. 타오르는 불길에 기름을 부었다고나 할까. 비등하던 여론은 반대로 급선회했다. 여론 변동 추이를 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7월 중순 ‘카트’ 보도가 나간 이후 8월 첫 주 여론조사에서 반대가 찬성을 압도했다. 응답자들은 가장 큰 반대 이유로 테러범·범죄자의 잠입 우려와 이슬람 문화 유입을 꼽았다.

그림 4 제주도 예멘 난민 수용에 대한 국민여론



13) 중앙일보(7월 13일) “한국여성 수행한 예멘인 환각제 소지…징역 1년” 제하 기사에서 ‘카트’의 국내 유입 문제를 거론

14) 카트: 향정신성의약품(메스케치논 유사체) 원료인 ‘카틴’과 ‘카티논’성분이 함유된 식물로 흥분, 식용 감퇴, 희열감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다. 예멘을 포함한 지부티, 에티오피아, 소말리아에서는 생산 및 판매와 흡입이 합법화되었으나, 국내는 물론 대다수 국가에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규제약물로 지정하고 있다.



국민의 우려는 명확하다. “카트 문화가 한국에 유입되어서는 안 된다.”, “마약을 흡입하고 환각상태에서 어떤 범죄를 저지를지 알 수 없다.” 7월 16일 제주청은 곧바로 예멘 난민신청자에 대한 마약류 검사 시행에 들어갔다. 마약검사 키트를 구매하여 심사대상자 중 출국자와 10세 이하를 제외한 464명 전원을 대상으로 소변을 채취, 마약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4명의 양성 반응자가 나왔다. 제주청은 이들을 모두 난민 불인정한 뒤 경찰에 수사 의뢰하였고, 경찰은 두 번의 수사를 거쳐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국민의 안전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범죄경력 확인 작업도 병행하였다. 우선 재외공관을 통해 예멘인이 국내 입국 전 거주국에서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알아보았다. 경찰청에는 예멘인 형사사건 입건자가 있는지 자료요청 하였다. 조회 결과 범죄경력자는 한 명도 없었다.

테러범이 잠입했다면 국가적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엄중한 사안인 만큼 제주청은 관계 기관과 더욱 긴밀하게 공조했다. 예멘 난민신청자 전원에 대하여 테러단체 가담, 추종, 지지 여부 등을 확인하였다.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사람은 보류자로 분류해 정밀심사에 들어갔다. 다각적인 조사 끝에 5명은 체류 부적격자로 판단해 난민불인정 결정을 하고 출국명령을 했다.¹⁵⁾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소변채취와 범죄경력조회 둘 다 인권 침해라며 이를 중단할 것을 권고하였다.

난민심사가 한창이던 8월 1일, 법무부장관이 국민청원 답변석에 앉았다. 6월 13일 처음 게시된 청원은 일주일 만에 공식답변 요건인 ‘한 달 내 20만 명 이상 동의’를 훌쩍 넘어선다. 청와대가 먼저 나섰다. 6월 20일, 청와대 대변인은 ‘어제 대통령이 제주도 예멘난민 현황 파악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했다. 브리핑 전문을 그대로 옮겨본다.

“제주도는 비자 없이 들어올 수 있지만, 비자 없이 들어올 수 없는 나라가 있다.
무사증 입국불허국가 11개국에 지난 6월 1일부터 예멘을 추가한 상태다. 현재 예멘

15) 출국명령을 받은 5명은 2019년 2월 19일 16시 D7502편(쿠알라룸푸르 행)으로 출국했다.

난민 500여 명이 들어와 있는데 더는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다.
이미 제주도에 들어와 있는 예멘 난민들은 경비를 다 쓰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이들에게 빵이나 밀가루 같은 식자재와 무료 진료 지원을 할 계획이다.
원래는 난민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취업이 가능하지만, 인도적 필요성에
따라 그 전이라도 내국인의 일자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낮은 농사, 축산 관련
업종으로 취업 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제주 지역 도민을 중심으로 걱정과 우려가 나오고 있어 불필요한 충돌이나 잡음을
방지하기 위해 순찰을 강화하고 범죄 예방에 집중적으로 나서고 있다. 예멘 난민들이
위험한지 아닌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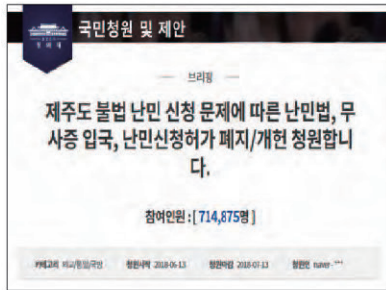
그 사이 청원 참여는 계속되었고 714,875명이라는 역대 최대 동의를 기록하며
마감했다. 폭염과 열대야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2018년의 여름을 국민청원이
더 달구고 있는 형국이었다. 그만큼 정부의 답변에 귀추가 쏠려 있었다.

공식답변 기한은 8월 13일이지만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사인인 만큼 일정을
8월 1일로 앞당겼다. 이날 박상기 장관이 청와대 SNS 프로그램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장관은 난민법 폐지와 난민협약
탈퇴는 어렵지만, 국민여론을 감안해 난민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래는
장관의 발언 요지다.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협약 탈퇴 시 국제사회 발언권 약화와 국제적 고립, 국익에
미치는 문제점 등을 고려할 때 난민협약 탈퇴나 난민법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반영해 난민신청자의 신원 검증을 강화하겠습니다.

박해 사유는 물론 마약 검사, 전염병, 강력범죄 여부를 확인하여 엄정하게 심사를
진행하고 난민으로 인정될 경우 우리 법질서와 문화에 대한 사회통합 교육을
의무화해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법무부장관 국민청원 답변

국민이 청원에 뜨겁게 참여했다면, 청원의 대상인 예멘인들은 답변 내용에 뜨겁게 반응했다. 신원검증을 강화하겠다는 발표내용에 유독 눈길이 갔던 모양이다. 장관이 난민심사를 강화하겠다는 공식답변을 한 후 예멘인들이 총기 휴대 사진이나 카트 섭취 사진을 자신의 계정에서 삭제하거나 폐쇄하고 있다는 언론 기사가 나왔을 정도니 말이다. 제주청은 그전에 이미 자료를 확보하여 분석 중이었으니, 발 빠른 대처로 체류 부적격자를 걸러낼 수 있었다.

민원 1번지

집 근처에 무슬림 집단 거주지가 들어선다면 주민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무슬림 혐오로 한창 떠들썩하던 8월 중순, 언론보도¹⁶⁾ 하나가 나왔다. 제목은 이렇다. ‘예멘 난민신청자 위해 제주에 난민캠프 생겼다.’ 아랍에서 10년 이상 선교 활동한 목사들이 ‘사마리아인의 행동’ 단체를 만들어 예멘인에게 숙소로 제공하며, 최대 수용인원은 80~100명이라는 내용이다.

해당지역 주민, 이장, 학부모, 교직원들이 들고 일어났고 여기에 난민 반대 단체까지 가세했다. 요구사항은 단 하나, 즉각적인 퇴거다.

제주청은 그전부터 종교계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000 펜션에도 여러

16) 8월 14일 국민일보

차례 방문하였다. 당시 예멘인 입주자는 13명이었다. 언론보도 전에는 조용했는데, 보도가 나오자 주민들이 결집하여 행동에 나섰다.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 “왜 세금으로 난민이 살 집 마련해 주냐”, “조용한 마을에 웬 수용소냐.”, “너희들이 입국시켰으니 당장 판 데로 데려가라.”, “문제 생기면 다 책임져라.” 제주도청도 집단 항의 전화에 몸살을 앓고 있었다.

8월 17일 마을회관에서 대책회의가 열렸다. 제주청과 도청, 이장과 00초등학교 교직원, 난민 반대단체 관계자와 학부모 20여명, 사마리아인의 행동 목사와 관리자 등 4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 제주청에서는 관리과장과 아랍어 통역직원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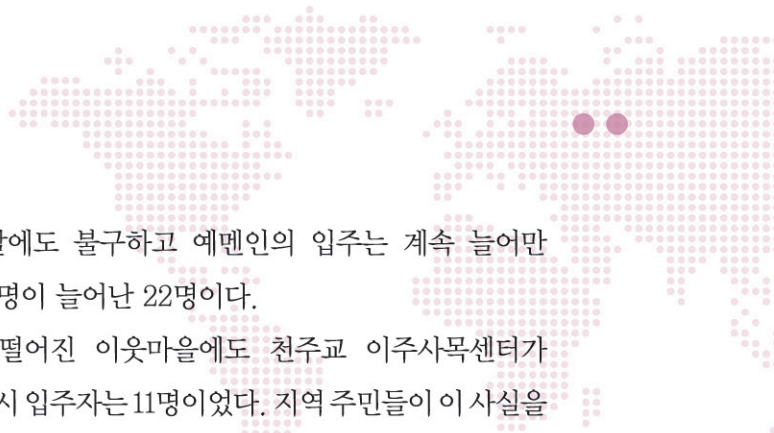
주민들은 펜션이 등하곶길에 위치한 점, 주민 동의 없이 장소를 일방적으로 정한 점, 범죄예방 대책이 없다는 점을 들며 예멘인을 즉시 다른 데로 이동시키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아이들을 학교에 안 보내겠다고 한다.

사마리아인의 행동 목사는 “이미 3개월분 임차료 650만 원을 선불로 냈고, 특별한 사건도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민원 때문에 이동하는 건 합리적인 사유가 되지 않으며, 입주자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며 주민들에게 먼저 양해를 구했다. 다만, 정부차원에서 숙박시설을 마련한다면 이동시킬 용의가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도청은 도 예산으로 이동 수용할 시설을 마련하는 건 곤란하고, 주민의 민원으로 도청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며 사마리안 측에 조속한 시일 안에 숙소를 다른 장소로 이동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마지막으로, 제주청은 정부차원의 숙박시설 제공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대신 사마리안 측의 결정 여부에 따라 적극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동을 결정하면 예멘인 13명을 민간과 협의해 2~3명씩 분산 배치하고, 계속 데리고 있겠다면 경찰과 연계하여 방범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제주청은 회의 후에도 주 2~3회 현장을 방문하여 상황을 점검하고 예멘인 계도에 나섰다. 경찰에는 주기적인 순찰을 독려하였다.

그 후에도 항의는 계속되었다. 2주 후 회의가 다시 열렸으나 사마리안 측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주민 반발에도 불구하고 예멘인의 입주는 계속 늘어만 갔다. 9월 11일에 파악한 인원은 9명이 늘어난 22명이다.

게다가 해당지역과과 1.9km 떨어진 이웃마을에도 천주교 이주사목센터가 운영하는 예멘인 숙소가 있었다. 당시 입주자는 11명이었다. 지역 주민들이 이 사실을 알고 제주청에 예멘인 숙소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제주청은 개인정보 보호 관계로 이들에 대한 숙소 정보는 공개할 수 없음을 알리고, 관할경찰서와 파출소를 방문하여 돌아가는 상황을 설명하였다. 경찰은 치안 활동에 더 힘쓰겠다고 했다. 이웃마을을 찾아서는 숙소 담당자와 예멘인들에게 민원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당부하였다.

2차 심사결과 발표 다음날인 10월 18일, 학부모들이 초등생 자녀와 난민반대 단체와 함께 제주청을 방문하여 예멘인의 즉각 퇴거를 요구했다. 예멘인들 때문에 산책이나 운동, 외출도 못하고 아이들 등하교에 공포를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2달 전 발생한 세화항 여성 실종 사건도 예멘인 소행이라며, 옆집에 사는 강간범, 살인범 때문에 잠을 못자겠다고 한다.

청장은 그간의 노력과 앞으로의 치안 대책을 설명하고, 펜션 계약 만료 시점이 가까워 조만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예정이니 조금만 더 양해해 줄 것을 부탁했다. 주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도 덧붙였다.

2차 심사결과, 사마리안 펜션에 거주하던 21명 중 17명이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아 떠날 준비를 갖추었고 나머지도 곧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

이와 같은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예멘인을 대상으로 한국 생활에서 주의해야 할 점을 중심으로 계도하였다. 펜션 측에는 주민과의 소통과 마찰 방지에 노력해 주고, 특이사항이 생기면 즉시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인터넷에 떠돌던 무슬림 혐오 자료를 바탕으로 무분별한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리과장이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초소를 세워 매일 순찰을 돌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최대한 치안을 강화하고 비상연락망도 구축해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과객을 위한 자리

어느 날 문득, 사연 많고 버린 것도 많은 과객이 홀연히 제주에 나타나 문을 두드렸다. 누군가 하고 열어보기도 전에 손님 맛을 준비를 해 놓는다.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는 대문을 활짝 열어젖힌다. 나그네 된 자들이 아닌가! 인간이라는 존재는 여인숙과 같아 매일 아침 도착하는 기쁨 절망 슬픔의 방문객을 웃으며 맞으라 하지 않았던가.¹⁷⁾ 안으로 들여 음식을 대접하고 잠자리를 베푼다. 주위에도 알리니 십사일만들 한다. 공간에서 인심을 내어 ‘과객 보호막’을 쳐준다. 종교계와 민간단체가 그랬고 개인도 뒤지지 않았다. 이 장면에서 네 명의 주인공이 등장한다. 00호텔 대표, 국악연습실 운영자, 00기업 회장, 한국이민재단 올드보이. 이들 4인방은 각자의 영역에서 가문의 단비 역할을 자청하고 나섰다.

아빠라 불린 사나이

예멘인들이 러시를 이룰 때 공항 심사과에서는 이들의 체류지를 분석해 보고한다. 00호텔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5월 16일 파악한 예멘인 입국자 누계 350명 중 160명이 00호텔이다. 호텔은 시내 중심가 가까이에 위치한 1성급으로, 1박에 4만 원 수준이다. 왜 다들 여기로 가지? 의문은 곧 풀린다. 호텔 측은 방값을 절반만 받으며朝食과 간식도 제공한다. 이 소식이 페이스북¹⁸⁾을 타면서 예멘인들이 몰린 것이다. 그렇다면 호텔이나 그 인근이 우범지대로 변하지는 않을까? 괜한 걱정이다. 사건사고는 한 건도 없었다. 오히려 성금과 구호품이 답지했다. 호텔 대표 김00의 남다른 철학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사업가가 호텔을 연 목적이야 물어 뭐 하겠냐마는 꼭 주판알만 튕긴 건 아니다. 때로는 사업가 앞에 ‘사회’ 혹은 ‘자선’을 붙였다.

5월 1일, 김 대표는 예멘인 30명을 받으며 중동 단체관광객이겠거니 했는데 이튿날 또 비슷한 인원이 와서 체크인을 한다. 이쯤 되니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왜 왔는지

17) 잘랄 루미의 시 ‘여인숙’ 중에서.

18) 예멘 난민들은 페이스북에서 ‘Yemen Refugees in Jeju’라는 그룹을 만들어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다. 약 1,600명의 예멘인이 가입되어 있는데, 한국 네티즌에 알려지면서 지금은 비공개로 전환되었다.



물었더니 모두들 한 목소리로 이른다. “난민 신청하러 왔어요.” 김 대표는 그때부터 품을 넓힌다. 먼저 방값을 파격가로 깎아준다. 식사를 제때 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아침에 빵과 주스를 제공하고, 밥 해 먹으라고 주방도 개방해 준다. 그러니, 공항에 막 도착한 자도 다른 데 거처하던 자도 소문을 듣고 찾아든다. 6월 중순, 호텔은 170명이 운집한, 예멘인 집결지로 변해 있었다. 조사과장과 통역직원은 이곳으로 출근하다시피 하며 고충을 상담하고 동향을 파악했다. 김 대표는 이들과 부대끼며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었다고 전한다. 쓰레기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꾸짖고, 친구들을 데려와 한 방에 대여섯 명씩 자고 있으면 혼쭐을 내기도 했다고.

호텔 소식을 들은 적십자사가 300명이 5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식자재를 들고 찾아온다. 대신 숙박비를 내주겠다고 나선 이들도 나온다. 김 대표는 이들의 지원에 힘입어 숙박요금을 다 못낸 예멘인을 그냥 내보내 주기도 한다.

취업설명회에서 예멘인들이 사업주와 연결되면서 하나 둘 호텔을 떠나갔다. 김 대표는 그 때를 이렇게 회상한다.

“저도 처음에는 이들이 테러리스트면 어쩌나 걱정했어요. 무슬림에 대한 편견이 두려움을 만드는 거 같아요. 일자리가 정해지면서 고용주들이 호텔 앞에 차를 쫓 대놓고 나오기를 기다리는데...제가 다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예멘 애들한테 알려주었죠. 예멘에서 뭘 하고 왔든, 지금부터는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한다고.”

예멘인 한 명은 김 대표를 이렇게 기억한다. “미스터 김이 한국도 전쟁했던 나라라며, 아직 끝나지 않아 정상회담 같은 걸 하고 있는데 예멘도 잘 되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는 김 대표를 아빠라고 부른다. 김 대표는 그에게만이 아니라 모두의 아빠가 되었다. 일자리를 구해 떠난 이들은 지금도 주말이면 아빠를 만나러 호텔을 찾는다고 한다.

이주민 한가위축제에서 김 대표는 그간의 숨은 노력을 인정받아 도지사로부터 공로패를 받았다. 참가자 1,500명의 박수갈채가 이어졌다. 200명의 예멘인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아빠’를 연호했다.

예멘인 난민심사를 끝낸 연말 즈음, 제주청은 간단한 선물을 준비해 호텔을 찾아 그동안 애써준 김 대표에게 감사를 표했다.

상생의 꽃 ‘와르다’

2차 취업설명회가 있던 날, 예멘인 예닐곱 명이 무리지어 다닌다. 눈이 마주치자 두어 명이 먼저 인사를 건넨다. 공항에서 회부 심사했던 인물들이다. 한데, 같이 있는 여성분은 누구지? 인사를 나눴다. 국악연습실을 운영하고 있는 음악가다. 예멘인에게 연습실을 임시 거처로 내주고 있다며 일자리를 찾는데 도움이 될까 하여 같이 왔다고 한다.

국악인 하○○. 그녀는 어떻게 예멘인들과 연이 닿았을까. 때는 6월 초. 언론이 예멘 난민 기사로 몸을 풀던 무렵 페이스북에서 예멘인들의 노숙 소식을 접한다. ‘거리의 부랑아들 때문에 밖에 나가기 무서워’라고 생각했을 법한데, ‘잠잘 데가 없다면 우리 연습실이 비어 있는데’라고 생각하는 바람에 결국 사업자등록증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업종 전환까지 해버린 것이다. 국악인에서 레스토랑 운영자로.

그녀는 처음 떠올린 생각을 곧바로 행동으로 옮겼다. 60평 지하연습실에 이불을 깔고는 곧바로 예멘인 10여 명을 들인다. 막상 시작하고 보니 뭐든 궁하다. 친구들에게 SOS를 치니 이불과 음식을 들고 와준다. 주변의 성당에서 생필품을 제공하고, 제주청도 식자재를 지원한다.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면서 쉼터가 모양새를 갖추간다. 예멘인을 더 들이고 저녁에는 한국어 교실도 연다. 예멘인 20~30명이 용기종기 모여앉아 밥도 먹고 한국말도 배우는 광경이 펼쳐진다.

마냥 좋기만 할까. 이대로 쫓 가기 곤란한 일이 닥친다. 지하에 있는 비 주거 공간에 수십 명이 잠을 자니 장마철 위생 문제가 생긴다. 이에 더해 인근 주민들의 민원제기가 계속되고 있었다.

하씨는 천주교 지원 숙소로 거처 이전을 결정하였다. 제주청은 콤비 차량을 내어 이사를 도왔다. 9월 7일의 일로, 당시 예멘인 11명이 00아파트로 옮겨갔다.

취업설명회에서 연결되어 떠나는 자, 일자리를 못 구해 알음알음 찾아오는 자. 그렇게 연습실을 들락거린 사람이 100명에 달했다.

‘와르다.’ 꽃이라는 뜻의 아랍어로 예멘인들이 하씨에게 붙여 준 별명이다. 연습실을 거쳐 간 이들이 종종 와르다를 찾아와 함께 음식을 만들어 먹던 추억들을 얘기한다. 모두들 고향 음식을 그리워한다. 그리고 보니 제주에는 할랄 음식을 파는

데가 없다. 하씨는 퍼뜩 몇 명을 떠올린다. 주방장 출신 ‘아민’과 식당 서빙 경력자들. 국악을 공연하는 사람이 이제 식당을 열까 말까 고민하고 앉았다. 이번에도 떠올린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기로 결심한다. 친구와 의기투합하여 제주도 최초의 할랄 음식점을 연 것이다. 세 달의 공사 끝에 11월 초 사장이 되었다. 사업자등록증에는 ‘와르다 레스토랑’ 상호가 찍혔다. 와르다가 입을 열었다.



활짝 꽃 핀 ‘와르다’ 레스토랑

“예멘인들을 혐오나 연민의 대상으로 삼을 게 아니라 서로가 배우고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요? 빈 공간이 있어 비만 피할 수 있게 해주자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여기까지 왔네요. 예술 활동만 했지 사업체를 운영해본 경험이 없다 보니 저도 어이가 없어서 웃음만 나와요. 하지만 또 다른 기회가 운명적으로 찾아온 것 같아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업종 전환에 성공했을까. “이국적인 풍광의 제주에서 색다른 음식을 맛볼 수 있다.” 이런 입소문이 퍼지면서 내·외국인 관광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한다. 대박이다. 한 가지는 분명해 보인다. 예멘인들의 ‘만남의 장소’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사실. 하나 더 있다. 예멘인과의 인연을 사업으로 연결한 지금, 숙식 무료제공에서 고용으로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쉼터 공간 제공으로 이어가고 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7월 1일 오후 3시 경, 난민팀에 한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대전에 있는 물류기업 ‘00업체’ 안○○ 회장인데 오갈 데 없는 예멘인에게 거처를 제공하겠다고 한다. 숙소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던 때다. 취업설명회에서 일자리를 찾아간 이들이 취업을 포기하고 돌아오면서 다시 잠자리 문제가 불거지던 상황이었다. 가뭄에 단비다. 안 회장이 내놓은 숙소는 오피스텔 2개 호실로 서귀포시 00동에 있다.

나오미센터와 상의해 두 가족을 입주시켰다. 관리비는 나오미센터에서 지불하기로 했고 취사도구와 기본 살림도구는 적십자사와 제주청에서 지원하였다. 이들은 현재까지 오피스텔에 살고 있다.

안 회장은 제주시 00동에 있는 아파트 3채를 추가로 내놔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실제 입주는 하지 못했다. 그 후 00동에 있는 오피스텔 한 호실을 추가로 제공해주었는데 현재 여기에는 예멘인 가족이 살고 있다.

제주에 출장 차 내려온 안 회장이 제주청을 방문했다. 제주에 땅과 건물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데 비어 있는 오피스텔을 빌려준 거라고 한다. 건물이 아무리 비어있기로 무상으로, 그것도 혐오의 대상으로 떠오른 예멘인에게 선뜻 6채나 내어 주다니. 웬만한 배포는 아니다. 사회적 신분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의 실천이다. Noblesse Oblige!

제주청은 감사패를 만들어 전달하며 안 회장의 통 큰 기부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

든든한 선배

난민심사로 한창 정신없이 바쁜 날을 보내고 있을 때 (재)한국이민재단이 제주청에 손을 내밀었다. 재단은 처음에는 퇴직한 출입국 직원을 지원하기 위한 상조회 성격의 ‘출입국협회’로 출범하였다. 이후 20여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국내 체류 이민자의 한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쉼터의 예멘인들은 집이나 밥보다 ‘와이파이’를 더 중요한 것으로 꼽는다. 이들에게 정보는 곧 기회였다. 7월 초, 이주민센터가 구조를 변경해 쉼터로 자리 잡아가면서 예멘인들이 속속 입주한다. 이들은 정보고속도로를 달리고 싶어 했다.



정부 예산에 없는 항목이라 지원하기가 곤란했는데 재단에서 선뜻 인터넷을
깔아주었다.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예멘인에게 인기 있는 음식은 단연 닭고기다. 닭고기로
튀김과 찜을 해먹던 이들이라 한국에서도 무더위에 입맛 돋우는 영양식으로 많이
찾았다. 재단에서 생닭 100마리를 지원받아 이주민센터와 국악연습실에 거주하는
예멘인들에게 나눠주었다.

추석에 열린 이주민 한가위축제. 이주민센터가 주관하고 제주청이 후원한
행사다. 이주민센터에서는 행사에 먹을 음식으로 염소고기 후원을 제주청에 요청
하였는데, 이 역시 한국이민재단에서 먼저 나서서 염소 세 마리를 쾌척하였다.

이 외에도 외부강사를 섭외하여 12차례 실시한 ‘예멘인 한국문화 교육’ 강사료도
재단에서 감당해 주었다.

사건사고와 미담

난민심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짧게는 5개월, 길게는 8개월이 걸렸다. 그동안 제주청과 관계기관 그리고 사회단체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국민들이 크게 우려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해본다. 예멘인들이 출도 제한을 받지 않았다면, 즉 난민신청 후 자유롭게 출도 했다면 한국에 잘 정착할 수 있었을까? ‘항상 햇볕만 내리쬐면 사막이 된다’는 아랍 속담이 있다. 좋은 일만 생기길 기대하지만 오히려 그게 화근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들의 기대대로 흘러갔더라면 오히려 한국 정착이 더 어렵지는 않았을까? 대형 사건을 일으켜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지는 않았을까? 관리의 사각지대로 들어가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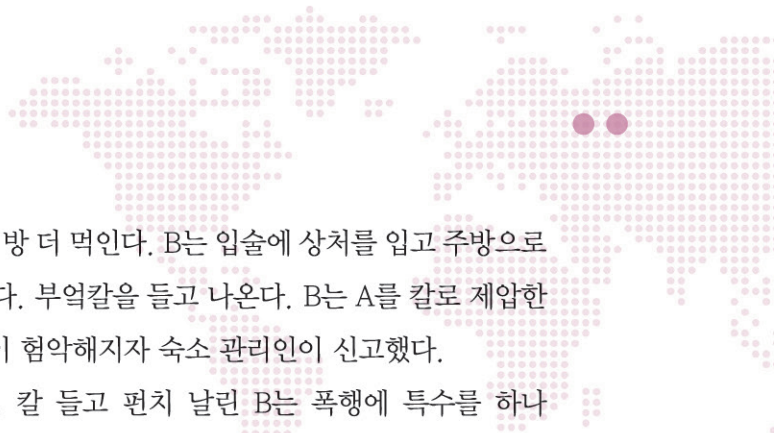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제주도라는 한정된 공간은 오히려 이점으로 작용했다. 제주청 입장에서는 집중 관리와 신속한 동향파악이 가능해 정책 시행이 용이했다. 전국으로 흩어져 버렸다면 생각도 할 수 없는 관리 방안들이 많이 나왔다. 예멘인들이야 민간의 후원을 한없이 입었고 취업 혜택도 받았으니 다른 이방인들에게 미안해해야 할 처지 아닌가.

제주와 같은 ‘대규모 난민 유입’ 사건은 언제든 어디서든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미래에 비춰볼 거울이 될 만하거나 기록해 둘 만한 가치가 있는 일들을 사건일지 형식으로 정리했다.

설거지는 누가?

장마가 빨리 끝나고 6월 말부터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었다. 폭염으로 폭폭 찜난다. 밥 잘 먹고 더위도 먹었는지 예멘인 두 명이 더위를 날리는 편지를 교환했다. 설거지 순번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다 한바탕 주먹 대결을 벌인 것이다. 공이 울린 때는 6월 어느날, 링은 00읍 선원 숙소, 결과는? 현행법 체포다.

사건의 내막은 이렇다. 두 명은 선원 취업한 동료다. 숙소에서 밥 잘 해먹었으니 그 다음은 설거지. 서로 순번을 두고 욕심각신한다. ‘네 차례다, 아니다 네 차례다.’



A가 B의 얼굴에 선방을 날린다. 한 방 더 먹인다. B는 입술에 상처를 입고 주방으로 들어간다. 설거지 하러 간 게 아니다. 부엌칼을 들고 나온다. B는 A를 칼로 제압한 다음 회심의 일격을 날린다. 싸움이 험악해지자 숙소 관리인이 신고했다.

경찰은 편치만 날린 A는 폭행, 칼 들고 편치 날린 B는 폭행에 특수를 하나 더 붙여 입건하였다. 둘은 끝내 합의하지 않았다. 경찰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하였고, 검찰은 A는 불기소, B는 기소하였다. 제주청은 두 명 다 난민 불인정했다.

출도제한 해제소송

다음날 예멘인 3명이 제주도 출도제한 조치 해제를 요구하는 ‘체류허가지역 제한처분의 취소’ 소송을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후 다른 예멘인 1명도 동일한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제주청은 출입국관리법 제22조 활동범위의 제한을 근거로 출도제한 조치를 내렸다. 이에 예멘인들은 출입국관리법 제22조 적용은 명확성과 과잉금지 그리고 적법절차 원칙에 반하고 또한 ‘난민협약’ 제26조¹⁹⁾의 이동의 자유를 위배하여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였다.

제주청장을 피고로 제기하였으나, 출도제한 조치의 처분청이 법무부장관이기에 피고를 법무부장관으로 경정하여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되었다. 결과적으로는 2건 모두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원고들이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아 출도제한 조치가 해제 되면서 소송을 취하하였다.²⁰⁾

3명 모두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아 2명은 곧바로 출도하였다. 1명은 제주에 체류 중인데 식당에서 일 잘하고 있어 당분간 나갈 일은 없어 보인다.

19)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26조: 합법적으로 그 영역 내에 있는 난민에게 그 난민이 동일한 사정 하에서 일반적으로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규제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거주지를 선택할 권리 및 그 체약국의 영역 내에서 자유로이 이동할 권리를 부여한다.

20) 2019. 4. 22, 2019. 5. 8. 각 소 취하 종결

출도제한 조치 전면 시행

2018년 4월 30일 부로 내려진 출도제한 조치의 대상은 국적을 불문하고 제주 무사증입국 제도로 입국하여 난민 신청하는 모든 외국인이다. 취지는 앞서 설명한 대로 제주 무사증입국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 조치로 예멘인만 제주에 발이 묶인 것이 아니다. 다른 국적의 난민신청자들도 제주에서 나갈 수가 없게 되었다.

예멘인 전에는 중국인이 난민신청자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들은 조용히 들어와 난민신청을 하고 조용히 다른 지역으로 나갔다. 특히 특정종교 신도들은 모 처에 숙소를 정해 놓고 같이 지내다 외국인등록증이 나오면 소리 없이 서울로 올라가곤 했다. 숙소는 ‘임시거처’ 개념이었다. 그런데 이제 갈 길이 막혔다.

중국 다음으로 많은 국적은 인도다. 이들은 출도 요구와 함께 예멘인처럼 빨리 취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해수욕장의 파렴치범

여름휴가가 시작되면 제주도는 관광객으로 넘쳐난다. 제주 서쪽에 있는 이호테우 해수욕장도 그런 곳 중 하나다. 제주 시내에서 가깝고 파도가 세지 않아 가족 단위 관광객들로 항상 붐빈다.

더위가 일찍 온 탓인지 이호테우는 7월 초부터 이름값을 한다. 여름의 해수욕장에 바다를 즐기러 오는 사람만 있을까. 다른 볼거리에 부지런히 눈을 돌리는 사람도 있는 법. 개중에는 선을 넘었다가 낭패를 보는 사람도 있다. 욕심을 품고 기웃거리다 덜미를 잡히는 파렴치한들 말이다.

7월 무더웠던 어느날 경찰이 제주청 당직실로 다급하게 전화를 넣었다. 이호테우에 예멘인으로 보이는 남자 두 명이 여자화장실 사진을 찍고 있다는 신고를 받았으며, 같이 현장으로 가보자는 것이다.

비상연락을 받은 조사과장과 아랍어 통역 직원이 해수욕장으로 급히 달려갔다. 화장실 주변으로는 설치된 CCTV가 없어 발로 뭉 수밖에 없는 상황. 경찰과 함께



현장을 수색하였으나 예멘인은 보이지 않는다. 해수욕장을 이 잡듯 뒤지고 주변 일대를 탐문하였으나 종적은 묘연하다.

수색을 하던 중 신고자를 만나게 되었다. 신고 경위와 증거자료는 있는지, 용의자 인상착의는 어떤지 물었다. 신고자는 “예멘인으로 보이는 외국인들이 여자화장실 주변을 서성이는 걸 봤는데, 그들이 여자화장실을 촬영했는지는 눈으로 보지 못했다”고 한다. 사진을 찍었을 거라고 추측했다는 것이다.

수색을 계속하다가 해수욕을 하고 있던 인도인을 발견하였다. 물어보니 남자화장실에서 모래를 털기는 했으나 여자화장실 근처에는 얼씬도 안했다고 한다. 신고자는 그제야 털어놓았다. 최근 제주도에 예멘 난민 문제가 불거져 예멘인들이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신고했다고.

해프닝으로 끝났다. 하지만 그냥 넘어가고 말 사안은 아니다. 성범죄 문제 아닌가. 예방이 최선이니,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로 했다. 유형별, 상황별 성범죄 사례를 모아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한국법질서 교육 시간에 특별히 강조하였다. 경찰과 민간에서도 성범죄 예방 교육을 하였다.

남의 카드를 탐하지 말라

사건 ① 체크카드 부정사용

8월 *일, 이주민센터 숙소에서 예멘인 두 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사건은 두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5월 *일 저녁, A는 친구 B와 함께 시청 대학로 일대를 거닐다 길바닥에 떨어져 있던 체크카드를 주워 주머니에 슬쩍 넣는다. 그러고는 편의점에 들러 양주를 산다. 이렇게 카드로 굵은 액수가 20만원이다. 분실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편의점 CCTV 영상으로 범인의 인상착의를 확인한 다음 위 숙소에서 두 명을 검거한 것이다. A는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고, B는 A와 동행만 했을 뿐 카드사용과는 무관하여 참고인 신분이 되었다. 사건 발생일은 5월 *일이고, 검거일은 8월 *일이다. 날짜에 주목하기 바란다. 그 사이 벌어진 또 다른 사건에 이들의 이름이 등장한다.

사건 ② 신용카드 부정사용

7월 *일 이번 사건 연루자는 네 명이다. A와 B도 포함되었다. 7월 *일 저녁 C는 중앙로 근처에서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인근 마트로 가서 보드카 한 병을 산다. 그러고는 B한테 카드를 건네며 양주 한 병을 더 사오라고 시킨다. 결제 금액은 총 14만원이다. A와 D는 사건 현장에는 동행했으나 카드사용과는 무관하다. 즉 이번 사건의 피의자는 B와 C이고, A와 D는 참고인이다.

경찰은 B와 D는 무혐의 처분하고, 피의자 A와 C는 신용[체크]카드 부정사용죄로 기소하였다. B는 심부름만 한 것으로 확인되어 피의자 신분을 벗었다. 제주청은 피의자 두 명은 난민 불인정, 참고인 두 명은 인도적 체류허가 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예멘인들은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문화를 신기해하며, 버려지거나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카드를 주워 수집용으로 보관하고 있다고 한다.

신기하다고 남의 물건을 슬쩍하고 수집해서는 안 되는 법. 제주청은 예멘인들을 불러 기초법질서 교육을 다시 했다.

브로커 색출

취업 소개는 제주청만 한 게 아니다. 민간단체도, 개인도 했다. 일자리를 연결해 주는 차원이니 물론 무료다. 여기에 돈이 끼어들면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사업자등록한 사람이 돈 받고 일자리를 소개한다면야 누가 뭐라고 할까. 허가 없이 살짝 해먹는 사람이 문제다. 우리는 이런 인간을 브로커라 부른다.

8월 초, 제보 하나가 들어온다. 인도인 두 명이 50만원을 받고 예멘인에게 어선과 건설 쪽에 일당제 취업을 알선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그럴 필요가 있을까? 당시 어선원들은 그만 두겠다고 줄 서던 판국인데, 어쨌거나 조사에 착수했다. 가뜰이나 이직 퇴직이 많아 체류지 파악에 골머리를 썩이고 있는데, 브로커까지 끼어들면 체류질서에 구멍이 생긴다. 반드시 잡아내야 했다.

결론은 다소 싱겁게 끝났다. 조사과는 인도인 신원확인에 들어가 어렵사리 두 명을 찾아낸다. 불러서 조사했으나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 돈을 준 예멘인도 없다.



증거불충분이다. 인도인에게 추후 물증이 나타나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고
내사 종결했다.

대규모 난민이 발생하면 관리의 첫 단추는 소재파악이다. 어디서 일하고 어디서
자는지 훤히 꿰고 있어야 무슨 일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제주청은
제주 전역을 돌아다녔고, 예멘인 숙소와 일터를 모두 알아내 현황을 유지했다.

취업브로커가 문제되는 건 관리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브로커는 하는 일이
불법이라 소개 업종도 불법적인, 즉 음성적인 곳에 알선할 공산이 크다. 일시적이든
장기적이든 관리의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이다. 브로커 색출은 이래서 중요하다.
제주청이 브로커 혐의자에 대해 조사를 엄격히 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폭탄테러 모의

제주에 온 예멘인 가운데 테러범이 끼어 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눈
딱 감고 외면해 버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테러단체인 알카에다 아라비아반도
지부가 예멘에 딱하니 진을 치고 있지 않은가. 그 중 한명이라도 제주로 잠입했다면?
국가적 위험이 아닐 수 없다.

제주청은 테러범을 테러단체 추종자·지지자·동조자도 포함하는 넓은 개념
으로 정의 내렸다. 테러 냄새가 나는 곳 근처에만 가도 테러범으로 보겠다는
말이다. 오이 밭에서 신발 끈 고쳐 매는 자가 있는지, 배나무 아래서 갓 고쳐 쓰는
자는 있는지 눈을 부릅떴다.

9월 *일 퇴근 무렵. 서울경찰청에서 민원인으로부터 받은 제보 내용을 제주청에
유선으로 알려왔다.

“예멘 난민신청자로 추정되는 자가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폭탄테러를 모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디를 날리려고? 무시무시한 제보다.

제주청은 정보·수사기관과 합동조사반을 꾸려, ‘카톡방과 예멘인’ 단서 하나를
가지고 제주에서 김서방 찾기에 나섰다. 먼저 카톡 대화명과 이름이 비슷한 김서방

네 명을 추려내 용의자 리스트에 올렸다. 신상 조회 결과 혐의점은 없어 보인다. 네 명의 일터를 돌아다니며 본인 동의를 받아 휴대폰 내용을 확인했다. 나온 건? 다행인지 불행인지, 없다. 한 명은 카톡방의 대화명 이름과 같긴 했으나 얼굴이 달랐다. 수사기관에서 카톡방 대화자의 IP 추적에 들어갔다. 나온 건? 이번에는 있다. 대화자의 위치는? ... 예멘이었다. 한국이 아니라 예멘에서 나는 대화로 밝혀졌다.

공짜 술은 없다

간간이 폭행 사건이 일어난다. 한국인 vs 예멘인. 이 시합에서 피해자는 항상 예멘인이다. 이번에도 예멘인 두 명이 흠씬 두들겨 맞았다.

10월 *일 새벽, 시청 맞은편 술집. 술을 마시던 오늘의 주인공들, 눈이 마주친다. 예멘인이 합석을 제의하고 한국인이 이에 응한다. 2대2 술판이 벌어진다. 초대된 자와 초대에 응한 자, 기분 좋게 술잔을 주거나 받거나 한다.

술자리가 끝나갈 즈음, 술값에 대한 합의가 안 된 모양이다. 카운터에 선 사람은 한국인이다. 예멘인은 그냥 나가버린다. 계산을 치르고 나온 한국인의 편치가 작렬한다. 주먹세례를 퍼붓고는 켄겔음으로 사라진다. 예멘인 2명의 얼굴은 붉으락푸르락 다채롭게 물들어갔다. 도망간 2명은 며칠 후 경찰에 검거되었다.

술값이 문제였다. 초대자가 다 내거나 더 많이 내는 게 불문율이다. ‘내가 쓴다’의 뜻이므로, 합의가 안 되는 경우도 문제였다. 사람 머릿수만 세어 보면 되니까. 한국에서는 이미 정착된 전통(?) 아닌가. 한국인은 전통에 따르자 했고 예멘인은 거절했다. 한국인은 술 먹튀가 꽤심했고 예멘인은 술값 강요가 무서웠다. 그리고 보니 이 역시 문화 차이에서 비롯되었나 보다.

무슬림 교리는 음주를 엄격히 금하고 있다.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제주 예멘인의 음주는 일상화되어 가는 분위기다. 술로 인한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제주청은 과도한 음주 자제 안내문을 만들어 페이스북에 게재하고, 실태 조사에서도 음주 사고는 본인의 심사결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렸다.

새로운 생명의 탄생



제주도 출생 난민1호 '제민'

예멘인 대다수는 홀로 건너온 젊은 남성들이다. 그중에는 가족이나 부부도 끼어있다. 이 중 남편과 함께 온 한 여성은 제주도 입국 당시 임신 8개월 만삭에 가까운 몸이었다. 이 여성은 7월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자연분만으로 건강한 사내아이를 출산했다. '세이프 더 칠드런'²¹⁾ 단체에서 출산비용을 후원하고, 출산 전 발생한 의료비는 제주청에서 일부 지원하였다.

부부는 퇴원 후 아이를 안고 제주청을 찾아 아이의 난민신청을 했다. 청장이 부부의 부탁을 받고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었다. '제민'. 제주에서 생명을 얻었으니 장차 민생을 구제하라는 의미를 담았다고 한다. 현재 이들 가족은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아 제주에 체류 중이다. 제민이 아빠는 제주시내 물류업종에서 일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부부는 가끔 난민심사팀을 방문한다. 엄마 품에 안긴 제민이, 훌쩍 컸다. 성장하는 모습을 보자니 아이의 미래가 궁금해진다.

21) 세이프더칠드런: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 구호 비정부기구로, 한국에서는 1953년 이후부터 국내외 아동의 건강, 보건, 의료, 교육을 비롯한 아동 학대 예방 치료 사업, 결손 빈곤 가정 어린이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숙소 이전 지원

예멘인의 숙소가 늘어나면서 거주 장소도 제주 전역으로 퍼져나간다. 취업 포기과 잦은 이직으로 체류지 변동이 수시로 발생하고, 그에 따라 지역 주민의 민원도 늘어난다.

제주 불교대책위는 게스트하우스 방 세 개를 임차하여 예멘인 10명에게 제공하고 있었다. 7월 중순, 불교대책위는 숙소 이전을 결정한다. 예멘인의 체류가 길어지면서 게스트하우스에 묵던 다른 손님들과 갈등이 생겨서다. 예멘인들이 주방을 점령하여 이슬람 음식을 해먹으면서 냄새를 풍겨 손님들이 숙소 측에 불만을 제기한 것이다. 8월 11일, 제주청은 불교위의 요청에 따라 차량과 기사를 지원하여 이사를 도왔다. 9월에는 국악연습실 거주 예멘인 11명이 다른 숙소로 옮기는데 차량을 지원하였다. 국악연습실 역시 인근 주민의 민원 제기 때문에 이사를 결정했다.

이외에도 ‘00업체’이 제공한 서귀포 인근 오피스텔에 예멘인 10여명 이전, 천주교의 공소로 예멘인 10여명을 이전 지원 하였다.

7월에서 9월로 넘어가는 기간 동안 제주청은 예멘인 체류 문제로 인한 2차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주야, 휴일 없이 이전 지원에 나섰다.

이주민 한가위축제

어느 나라 어느 민족도 고유한 명절을 지낸다. 이슬람도 우리의 한가위와 비슷한 시기에 최대 명절인 ‘이드 알 아드하’를 쇠나. 하지만 명절이 꼭 즐거운 기억으로만 남는 건 아니다. 예멘의 경우가 그렇다. 예멘은 내전이 시작되면서 축제가 피로 얼룩졌다. 내전이 한창이던 2015년 9월, ‘이드 알 아드하’²²⁾를 맞아 모스크에서 예배를 보던 수십 명이 폭탄 테러로 희생되었다. 비탄에 빠진 예멘 명절의 한 단면이다.

타향에서 타국의 명절을 맞으면 고향의 그리움이 달래질까. 고향이 그리워도 못가는 외로움을 달래주고자 예멘인들을 한국의 명절 행사에 초대했다.

제주청과 도청이 후원하고 이주민센터에서 주최한 한가위 축제가 종합경기장

22) 메카 성지순례가 끝나고 열리는 이슬람 최대 축제로 대제(大祭), 즉 큰 명절이라는 뜻이다.



에서 열렸다. 제주에 살고 있는 이주민 1,500명이 모였다. 행사에 얼굴을 내민 예멘인 200여 명의 표정이 모처럼 밝아 보인다.

제주청장과 도지사, 도의회 의원도 자리했다. 도지사와 도의원은 무대에 올라 춤을 가장한 몸 개그로 좌중에 웃음을 안겼다. 제주청은 염소 세 마리를 내놓았다. 나라와 민족은 다르지만 흥겨운 한마당에 마음은 하나가 되지 않았을까.

함께 이룬 안전망

무리지어 거리를 배회하고, 노숙하는 예멘인들을 누가 예쁘게 봐줄까. 무서워서 피하지. 주머니가 텅 비고 벌어먹을 일거리도 없으면 탄 생각하기 마련이다. 그런 생각을 생생하게 꿈꾸고 과감하게 실천하기 전에 막는 게 제주청의 임무다. 순찰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최소한의 생존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것이 범죄자를 안 만드는 길이고,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길이다. 도청과 깊이 있는 대화에 들어갔다. 제주청장이 도청으로, 도지사가 제주청으로 오가며 협의한 결과 예멘인에게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6월 초부터 협의에 들어갔다. 6월 4일, 도청 관광정책과장 일행이 제주청을 방문했다. 예멘인 난민심사 관련 진행상황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러 온 것이다. 이 자리에서 제주청은 생필품과 주거, 의료와 취업 지원에 도청이 나서 줄 것을 부탁하였다.

6월 17일. 청장과 조사과장이 도청을 찾았다. 도지사와 부지사, 국과장급 간부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청장은 생계비 부족으로 예멘인 노숙자가 발생하고 있는 현 상황을 설명하며 도 차원의 예산지원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도지사는 인간의 존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이 지출되더라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하며 도청 간부들에게 지출이 수반되더라도 지원활동을 전개하라고 지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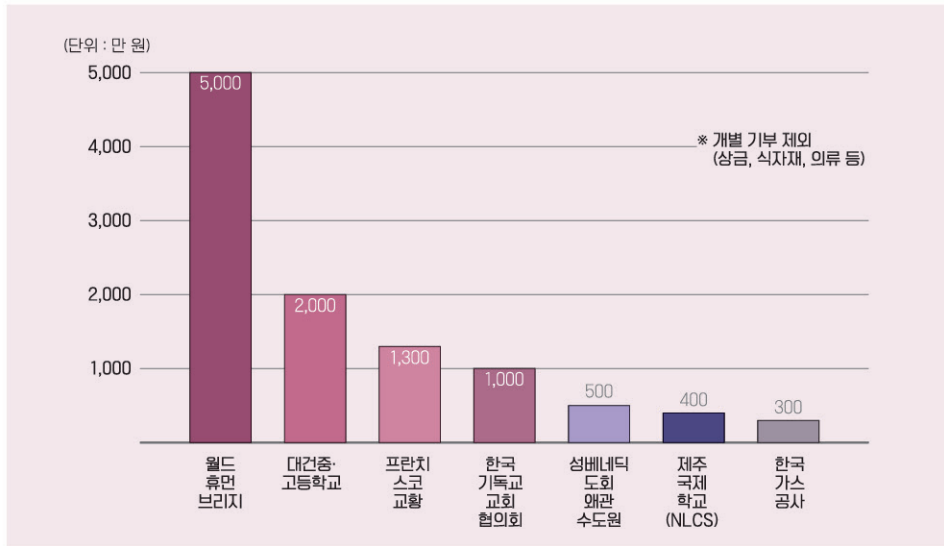
6월 24일. 이번에는 도지사가 제주청을 찾았다. 청장의 인도적 지원 요청에 도지사는 예산 지원 의사를 거듭 밝힌다.

두 기관의 협의는 추정 예산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도청은 추정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여 도의회에 제출하였고, 도의회는 예산소위 심사를 거쳐 8월 2일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도청은 배정받은 예산으로 의료와 식자재, 숙소 제공단체에 대한 지원 사업에 나섰다.

그림 5 제주 예멘 난민 후원금



8월 3일, 제주청에 손님이 찾아왔다. 성남시에 있는 국제구호개발 NGO인 WHB(월드휴먼브리지) 대표가 제주의 예멘 난민 소식을 듣고 방문한 것이다. 제주이주민센터 대표의 얼굴도 보인다. 6월 말, WHB는 제주청에 예멘 난민을 후원하고 싶다는 어느 단체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게 좋을지 물어왔고, 제주청은 당시 예멘인 지원에 힘쓰던 이주민센터를 추천하였다. 그렇게 자리가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서 WHB는 이주민센터에 후원금 5천만 원을 전달하였다.

민간에서도 온정이 줄을 이었다. 한국국제학교(KIS) 대외협력이사가 제주청을 찾아 교장단의 성금 모금운동을 소개하며 구호에 동참할 뜻을 전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아랍아카데미에서도 지원 의사를 알려왔다. 단체와 개인의 후원금 문의가 끊없이 이어졌다. 제주청은 대한적십자사와 제주이주민센터, 이주사목센터 등에 기부할 것을 안내하였다. 이에 따라 학교와 종교계, 그 외 여러 기관에서는 모금한 성금을 예멘인 지원 단체에 직접 전달하였다. 개인들은 자기 밥그릇에서



한 술 덜어 배고픈 이를 도왔고, 독지가들은 보이지 않는 곳까지 도움의 손길을 뻗었다. 주한 교황대사가 제주를 방문해 프란치스코 교황의 자선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00의류업체는 옷 1,000점을 나눠주었다. 적십자사는 식자재를, 글로벌 파이너스와 광주후원개발네트워크는 생필품을 배풀었다.

재능기부도 다양한 형태로 발휘되었다. 이·미용, 진료, 통역, 법률 서비스뿐 아니라 병간호, 급식 같은 용역 봉사에도 자원자들이 나섰다.

이러한 온정이 모여 사회안전망은 더 촘촘해졌고 도민 안전은 공고해져 갔다.